

중국의 대북한 정책 : 지속과 변화

최춘흠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중국의 대북한 정책 : 지속과 변화

최춘흠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인 쇄 2006년 12월 28일

발 행 2006년 12월 28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동북아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61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5,000원

© 통일연구원, 200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 최춘흠.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 ; cm. — (연구총서 ; 06-13)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381-1 93340 : ₩5000

349.12011-KDC4

327.510519-DDC21

CIP2006002855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1
II. 동북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입장	5
1. 중국의 대미 군사력 강화	8
2. 평화 노선 추구	11
III. 중국의 대북 전략 기조와 정책 현안	15
1. 중국의 대북 전략 기조	17
2. 정책 현안	21
IV. 평가와 전망	75
1. 평가	77
2. 전망	80
V. 결론	87
참고문헌	93
최근 발간자료 안내	97

표 목 차

<표 III-1> 중·북 고위급 인사 교류 현황(1998년~2002년)	21
<표 III-2> 중·북 고위급 인사 교류 현황(2003년~현재)	26
<표 III-3> 북한과 중국의 교역상황(1997년~2005년)	57
<표 III-4> 북한의 대중 무역 방식(2003년~2005년)	59
<표 III-5> 중국의 대북 주요 수입품(2003년~2005년)	60
<표 III-6> 북한과 중국, 한국, 일본과의 교역 추이(2001년~2005년) ..	61
<표 III-7>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1995년~2004년)	63
<표 III-8> 중국의 대북 원조 추이(1997년~2004년)	71
<표 III-9> 국가별 대북 지원액 비교(1995년 6월~2004년 7월) ..	72

I

서론

1950년 중국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한 이후 현재까지 중·북관계는 어느 시기에는 원만하였고, 어느 시기에는 소원해졌으며, 심지어는 악화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탈냉전이후 한반도는 북한의 핵개발 의욕으로 인해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이 날로 증대되고 이에 따라 중국의 외교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북관계를 단순한 사회주의 양국 관계로만 분석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중국의 역할을 많이 촉구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전략과 정책 변화는 향후 북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 남북관계 진전 가능성, 북·미관계 변화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의 대북 전략과 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북 정책을 분석함에 있어 주로 양국의 정치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양국관계의 발전 방향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북 전략과 정책의 변화의 폭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북관계에 있어 중요한 3개 분야인 정치, 북핵문제를 비롯한 군사·안보, 경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왜냐하면 3개 분야는 서로 맞물려서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첫째, 중국이 처해있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둘째, 중국의 대북 전략 기초를 설명하고 나아가 대북 정책을 현안 별로 3개 부문에 걸쳐 분석하며, 셋째, 중국의 대북 정책을 정책의 지속과 변화라는 측면에서 평가하

고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중국의 대북 정책을 예측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대북 정책을 상기 3개 분야로 구분하는 이유는 중국의 대북 개입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정치교류, 북한의 정치안정 유지노력을, ‘군사·안보분야’에서는 북핵문제와 양국간 군사교류와 협력문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교역, 투자, 경제 지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북한 정책의 지속과 변화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중국의 대북 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2001년 1월 부시(George W. Bush) 미행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001년 1월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Bill Clinton) 미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여 북한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기 시작하면서 북·미관계가 크게 악화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II

동북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입장

장쩌민(江澤民) 2기(1998. 3~2003. 2) 시기 동북아 정세는 미·일 동맹이 크게 강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중국은 미·일동맹 강화가 자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을 저해한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적, 군사적, 외교적 전략을 구사해 나갔다.

중국은 특히 부시 미행정부가 미국의 21세기 신군사전략인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확보라는 차원에서 해외 주둔 미군과 주일미군 개편작업을 추진하면서 한반도와 대만의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 확대를 촉구하는 미·일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이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것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정치적 위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장쩌민 정부는 자국의 평화와 발전(Peace and Development) 노선이 외교 정책의 기본임을 표방하면서도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동북아 안정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득이 된다는 판단에서 주변 환경의 안정적 관리와 대외 협력관계 구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나갔다.

중국은 우선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포위 시도에 대해 중국은 2001년 6개국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를 창설하여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지역안보에 대한 안보 협력 공감대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구축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대만의 독립 모색을 좌절시켜왔다.

중국은 주변 환경의 안정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북핵문제를 협상에 의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핵합의에 기여하여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하였다. 또한 중국은 대외 협력 관계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면서 한중 양국간 북핵문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에 대한 공동의 인식의 폭을 넓혀 나갔으며 남북관계 진전을 어느 국가들보다 더 촉구하였다.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핵합의로 북핵문제가 해결국면에 진입하여 한반도 안정이 유지되는 듯하였으나, 2001년 1월 부시 미행정부의 출범이후 미국이 대북 핵협상을 폐기함에 따라 북한이 이에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북·미관계가 크게 악화되는 국면을 맞이하였다. 2002년 10월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사실을 추궁하자, 북한이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을 시인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요구하자,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대북한 영향력 행사를 주문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 중국의 대미 군사력 강화

중국은 미국의 선제 핵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실험을 강행하여 핵전력을 강화하면서 자국은 ‘선제 핵공격 배제’를 천명하는 국가임을 강조하여 자국의 평화적 이미지를 제고시켜 왔다. 중국은 2005년 9월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 미국방장관 방중시(9. 18~9. 20)에도 ‘선제 핵공격’을 배제함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의 독립이나 핵보유를 미·일 양국의 묵인 혹은

허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입장에서 대대만 핵공격 가능성을 표명하였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위계획(Missile Defense Program, MD)에 일본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전략미사일 2차 공격 능력이 상실될 것으로 우려하여 전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일본이 2004년에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中期防衛力整備計劃, 2005년~2009년)에서 이지스함의 MD능력 확대, 패트리엇 미사일 능력 강화 등에 가장 큰 역점을 둘 것을 명시한 데 대해, 중국은 우주선 발사, 인공위성 영상장치, 조기 경보 감지기, 전자부문 능력 등을 확대하여 미·일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약 30기 정도의 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CBM)인 동풍(東風)31-C, 다탄두무기(MIRV)개발, 동풍(東風)21-C 중거리 탄도미사일, 약 650~730기 정도의 CSS-6와 CSS-7 단거리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여 대만의 패트리엇(PAC-3)미사일 시스템의 대중 위협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05년 처음으로 러시아와 대규모 합동군사훈련 실시하여 대만 및 한반도사태에 미·일이 군사 개입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음을 과시하였다. 중국은 미·일 동맹의 해군력 강화에 대해서도 잠수함 능력을 제고하여 약 55~70척의 잠수함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중국의 국방력은 ICBM과 SCBM의 핵능력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서양과 미국의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

중국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력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에게 양국간 군사협력을 촉구해 왔다. 중국은 향후

¹ David Shambaugh, *Modernizing China's Military: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pp. 330~332.

미·중 군사협력이 확대되는지 아니면 소원해지는 지는 완전히 미국의 입장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럽스펠드 미국방장관이 부시 행정부 국방장관으로서 처음으로 2005년 9월 중국을 방문하여 미·중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중국이 의도하는 양국간 고위 군사협력이 조성되었다.

중국은 처음으로 미국방장관에게 베이징(北京) 근교에 있는 유도미사일부대가 있는 제2포병사령부(The Second Artillery Corps Headquarters)를 참관케 하는 등 미국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럽스펠드 미국방장관의 요구인 양국 국방장관간의 핫라인 전화 개설을 거절하였으며, 아울러 미사일 숫자와 중국의 국방예산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의 핫라인 거부는 이미 미·중 정상과 외무장관 간에 핫라인이 있는 이상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 정부는 미·일 군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에 유럽연합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2004년 유럽연합의 대중국 무기수출금지조치 해제를 계기로 유럽연합으로부터의 무기수입 다변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장쩌민 정부가 추진하여 온 동북아 정책을 보면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의 정책 행위를 적극적인 면에서 고찰하면, 중국은 우선 미국의 대중 포위를 주변국들과 특히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여 대응하면서도 주변국들이 자국에 대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대외 협력 관계를 더욱 구축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정책행위를 소극적으로 보면 중국의 발전을 위협하지 않는 주변국들의 행위를 중국이 그저 수용한 결과로 나타난 점이다. 미국의 대대만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어떠한 무력시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일동맹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의 군사협력도 강화하지 않은 점이다.

상기 두 가지 해석 중 중국은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첫째, 중국은 우선적으로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둘째, 만약 중국이 미국에 대해 군사적 대치를 추진할 경우 주변국들이 미국의 위협 보다는 중국의 위협을 더욱 중시하여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원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 평화 노선 추구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2003년 2월 장쩌민 주석으로부터 주석직을 이양 받음으로 후진타오 정부가 출범하였다. 후진타오 정부 역시 장쩌민 정부가 추진하여 온 중국의 전략 즉, 군사력 강화와 평화 추구를 동북아 전략 기조로 삼으면서 자국의 대미 군사력을 강화하고, ‘평화굴기(和平崛起, Peaceful Rising) 노선’을 표방하였다.

후진타오 정부는 장쩌민 정부의 평화와 발전이라는 대외 정책 기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화평굴기 노선’을 천명하여 중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미 외교와 주변국 외교를 전개하고자 하였다.² 아울러 후진타오 정부는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해 장쩌민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² 정삐젠(鄭必堅, 전 중앙당교 부총장)이 2003년 11월 처음으로 ‘화평굴기’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이어 후진타오 주석(2004년 2월경에)과 운자바오(溫家寶) 총리(2004년 3월경에) ‘화평굴기’ 개념을 옹호함으로써 후진타오 정부의 대외 노선 슬로건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여러 국가들의 압력과 중국 지도층의 재고에 의해 2004년 가을경에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다. <news.xinhuanet.com/2004~03/36/content_1386611.htm.>.

지로 미국의 소위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면서 중국의 군사적 투명성을 알린다는 입장에서 미국과의 고위급 군인사 교류와 군사협의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북핵 문제 관련, 부시 미행정부는 제네바합의의 개선된 이행을 북한이 준수하지 않는 데 대해 북한과 합의된 제네바합의의 실효성에 대해 의혹을 보내었다. 중국은 북핵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일 양국이 군사적 개입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대북 무력 개입을 사전에 억제한다는 입장에서 한반도비핵화를 줄곧 지지하여 왔다. 중국은 6자회담에서 북·미간 이견에 대한 중재 역할을 담당하면서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핵포기를 중용하였다.

중국은 한·미 동맹이 북한에 대해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북 군사협력을 강화하지 않고 다만 북핵문제로 인한 미국의 대북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한국과 북한에 줄곧 촉구하였다.

특히 2006년에 중국은 외교 노선으로 ‘화자위선(和字爲先)’을 제시하여 갈등 조장보다는 화합을 우선시 한다는 입장을 표방함으로써 무엇보다 대미관계를 ‘화(和)’ 입장에서 풀어나가야 함을 암시하였다. 중국의 ‘화자위선’ 노선은 미국과의 문제해결에 있어 그동안 ‘도광양회’ 차원에서 미국과의 문제를 소극적으로 해결하려하였다면, ‘화자위선’은 대미 접근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면을 많이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중국의 노선 변경은 기존의 ‘도광양회 노선’이나 ‘화평굴기 노선’을 완전히 사멸시킨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06년 7월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전개된 미국주도의 대북 유엔결의안에

중국이 찬성한 것은 무엇보다 후진타오 정부가 동북아 안정 유지에 중국이 책임지는 대국으로서 행동한다는 것과 미국과 함께 동북아 안정 관리를 위해 전략적 대화와 합의를 전개할 수 있음을 표명한 데 있다. 이로써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 안정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유엔안보리가 제재 결의할 경우 이를 지지함으로써 북한의 안정 그 자체보다 동북아 안정을 더욱 중시할 수밖에 없음을 표시한 것이다.

III

중국의 대북 전략 기조와 정책 현안

1. 중국의 대북 전략 기조

중국의 대북 전략 기조는 중국의 동북아 정세에 대한 입장과 한반도 전략 기조가 크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의 대미 군사력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평화노선 추구라는 두 가지 전략 기조가 가장 큰 비중으로 한반도에 적용되어 왔다. 즉 중국의 대북 전략 기조의 기본 방향 대부분은 중국의 한반도 전략 기조로부터 나온 것이다. 중국의 대북 전략 기조로는 우선 북한의 안정유지를 통한 한반도 안정유지, 다음으로 한반도비핵화, 중·북관계 강화,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유지, 남북한 자주평화통일 실현,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 개선 지지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대북 전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첫째, 중국은 북한의 핵 실험 이전까지는 무엇보다 북한의 안정을 통한 한반도 현상유지를 대북 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대북 정책을 추진해왔다.³ 중국이 기조로 삼고 있는 북한 붕괴 방지에는 북한 정권의 붕괴와 체제붕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경제난으로 허덕이는 김정일 정권일지라도 지지하여야 북한체제를 유지하여 북한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⁴ 중국은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대북 경제 지원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을 정치체

³ Fei-Ling Wang, "China and the Two Koreas: Conducts, Concerns and Constraints," p. 11. 왕 교수는 중국이 한반도 현상유지를 기조로 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중국이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서 안정된 미·중관계 지속을 원하는 데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아직까지도 자국의 경제발전 전략을 위해 한반도 안정유지를 원하는 것보다 미·중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한반도 안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⁴ 중국은 국제사회, 한국과 자국의 대북 지원이 전면적인 대북 경제 제재로 중단될 경우 북한은 길어야 3~4년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북한의 내구력에 대해 중국이 한국과 미국보다 더 심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제와 주체사상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라고 판단하여 주변국들의 대북 군사적 위협을 반대하여 왔다.

둘째,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 시기 때부터 한반도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김일성은 마오쩌둥 주석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에게 줄곧 핵기술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하였다. 중국은 한반도비핵화는 준수되어야 하며, 이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⁵ 후진타오(胡錦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중국은 북한의 붕괴 방지와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대북 관계를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김정일 정권 안정·유지 도모를 한반도 비핵화보다 더욱 중시하는 대북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셋째, 중국은 자국의 평화노선에 맞게 북한과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간다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대북 협력관계 강화는 내정불간섭 원칙하에 그리고 대북 경협 확대를 기반으로 전면적으로 협력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대북 경협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더욱 옹호할 것이라고 여겼다.

넷째, 중국은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하여 왔다. 중국은 남북관계 진전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긴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중국은 남북한 관계가 진전되면 될수록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축소되고,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있는 자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⁵ 중국이 한반도비핵화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한반도비핵화가 무효로 갈 경우, 대만의 핵무장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는 중국학자들의 견해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남북한 자주평화통일 지지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중국은 외세의 개입이 배제되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자주적인 입장에서 합의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이 남북한 통일과정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외세 특히 미국의 세력이 한반도에 개입되는 것을 원치 않음을 의미한다.⁶ 만일, 한·미 군사동맹 하에 한국 주도로 통일이 실현될 경우 중국은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적 영향력이 증대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하는 견해도 있다.⁷

주목할 점은 중국이 상기 대북 전략 기조에 발맞춰 미국과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과⁸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전략적 협력관계로 격상시키려 한 점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정부 출범이후인 2003년 초부터 후진타오 정부는 중국의 대북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모색은 북한과 함께 합의되었음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후진타오 정부는 ‘전통계승(繼承傳統)’, ‘미래지향(面向未來)’, ‘선린우호(陸隣友好)’, ‘협력강화(加強合作)’라는 대북 ‘16자 방침(十六字方針)’을 천명하였다. 장쩌민 주석은 2001년 방북하여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향하며 선린우호 속에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대북 협력관계 방향을 표방한 바 있다.⁹ 2003년 방북한 우방귀(吳邦

⁶ *Xinhua Daily Telegraph*, Beijing, December 9, 1997. 1997년 중국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자국의 한반도 사무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표명하였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한 자주평화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고 천명하였다.

⁷ Hamish McDonald, “Beijing considers its Korean Options,” *The Age* (September 7, 2003).

⁸ Jian Xu, “China’s Viewpoint toward Peace Forum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Forum on the Korean Peninsula: Strategy and Implementation*, KINU International Conference (June 9, 2006), p. 83.

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도 ‘16자 방침’을 조목조목 북한에 대해 설명하여 중국의 대북 협력은 미래지향적임을 강조하곤 하였다.

후진타오(胡錦濤) 정부가 ‘16자 방침’을 표명한 것은 기존의 중국의 대북 협력 방향을 계승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양국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한 데 있다. 더욱 주목할 것은 후진타오 정부가 북한과의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후진타오 주석은 경협 등 4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김정일과 논의하였다.

중국과 북한이 합의한 양국의 ‘4대 발전방안’은 고위급 인사의 교류 활성화, 협력분야의 다양화, 경협활성화와 공동발전, 상호협력정신으로 공동이익 옹호이다. 또한 후진타오 정부는 양국간 발전은 경협을 위시하여 여러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공동이익 추구라는 입장에서 출발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의 제안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전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실제로 전적으로 지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초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고 이어 10월 초에 핵실험을 도모함으로써 후진타오 정부가 추진하여왔던 김정일 정권의 유지가 한반도비핵화 보다 우선한다는 기존의 중국의 대북 전략 기조 순위를 제고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다.

⁹ 또 다른 ‘16자 방침’은 2002년 12월 19일 베트남 외교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발표할 때 나온 것이 있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2002년 12월 19일 중국-베트남의 전통적 우호 및 전면 협력 관계는 “장기안정(長期穩定), 미래지향(面向未來), 우호선린(睦隣友好), 전면적 협력(全面合作)”의 16자 방침 하에 실현될 것으로 표명한 바 있다. 『人民日報』, 2002년 12월 19일.

2. 정책 현안

가. 정치분야

(1) 중국의 대북 정치 관계 강화 모색

중국이 대북 정치관계 강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고위급 인사를 북한에 파견하고 북한의 고위급 인사의 베이징 방문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고위급 인사 방문 중 정상회담은 장쩌민 시대와는 달리 후진타오(胡錦濤) 정부부터는 아주 빈번하였다. 후진타오 정부는 대북 정치관계 강화를 통해 포괄적으로 군사·안보, 경제분야 등에 걸친 고위급 인사의 교류를 추진하려 하였다.

<표 III-1> 중·북 고위급 인사 교류 현황(1998년~2002년)

장쩌민 시대(1998년~2002년)

방문시기		방중(訪中) 또는 북한측 인사	방북(訪北) 또는 중국측 인사	의제	비고
년도	월일				
98	3.26 ~44	외교부 대표단		첸치텐(錢其琛) 국무원부총리면담	
	6.22 ~29		조남기(趙南起) 정협부주석일행	의례적 방문	
99	6.3 ~7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장쩌민(江澤民) 주석 접견 및 주룽치(朱鎔基) 총리 회견 *중국경제 무상지원약속 경제인사는 제외됨.	수행단: *당: 최태복(당비서) *정: 홍성남(내각총리), 백남순(외무상), 박동춘(외무성부상) *군: 김일철(인민무력상) *정당: 유미영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장) 등
	7.17	노동당 대표단			김영남 방중이후 2~3년간 드물었던 정당간 교류까지 활성화 하는 것으로 보임.

방문시기		방중(訪中) 또는 북한측 인사	방북(訪北) 또는 중국측 인사	의제	비고
년도	월일				
00	6.3	김정일 위원장		장쩌민(江澤民) 주석 회답	
	6.17	김일철 인민무력상			
	9.12 ~15		대외연락부 대표단	친선관계발전 강조	단장: 따이빙궈(戴秉國) 대외연락부장 94년 이후 대외 연락부장이 방문한 것은 6년만 임.
	10.22 ~26		즈하오텐 (遲浩田) 국방부장	고위군사 대표단 방북 전통적인 '혈맹관계'강조	대표단: 송광카이(熊光楷) 부총참모장, 장슈텐(張樹 田) 정치부 부주임, 첸궈 량(錢國梁) 선양군구사령 관, 천빙더(陳炳德) 지난 군구사령관, 중양군사위 판공실 주임 탄웨이신(譚悅 新), 링관(冷寬) 해군 부 정치위원, 쉬청둥(徐承棟) 공군 부정치위원, 류위엔 (劉源) 인민무장경찰부대 총부 부정치위원 등
01	2.9		당 대외 연락부 대표단	베트남, 라오스 등에 대한 순방길에 첫 번째 방문	단장: 왕자루이(王家瑞) 부부장 중국공산당을 대표하여 방북
	3.20 ~24		중국공산당 대표단	친선방문	단장: 쑹칭홍(曾慶紅) 당조직부장 중국공산당을 대표하여 방북 대표단: 외사판공실 주임 리우화치우(劉華秋), 대외 연락부 부부장 왕자루이 (王家瑞) 등 조직부와 대외 연락부 인원들
	4.11	조국전선	공청단 대표단	친선방문	당 외곽 단체들간의 쌍방 교류 및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함.
	7		장춘윈 (姜春云) 당 정치국 위원		중국공산당을 대표하여 방북
	11.10 ~13	인민군 친선참관단		친선방문	
02.	5.6 ~10		중국공산당 대표단		대표: 자칭린(賈慶林) 중 앙위원회 정치국위원 겸 베이징시 당서기

* 출처: 통일부, 「주간북한동향」(1998) 자료참고.

* <표 III-1>은 유하연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작성임.

<표 III-1>에서 보듯이 양국간 고위급 인사의 교류 특징을 보면, 첫째,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인적 교류는 보통 친선을 강조하거나 중·북 양국의 ‘혈맹 관계’를 강조한 대표단의 성격을 띤 것이 대다수였음에 반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는 6자회담과 맞물려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가 주를 이뤄 ‘혈맹 관계’ 강조보다는 ‘6자회담의 성공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중국이 애를 쓰고 있다. 1998년에는 첸치첸(錢其琛)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방북만이 있었으며 북한은 조남기 정협 부주석이 중국에 파견된 것이 전부이었다.

둘째, 1999년 경우 북한의 방중은 있었으나 중국의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이 50주년 중·북수교 기념 차 방북한 것 외에는 고위급 인사의 방북이 없었던 점이 특징이다. 19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중 당시 수행단은 당(黨) 최태복 당비서, 정(政) 백남순 외무상과 박동춘 외무성부상, 군(軍)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상 정당의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경제 인사는 단 한 사람도 없었던 점도 특이할 만하다. 당시 중국은 북한에 대한 고위급 인사의 교류 필요성을 크게 평가하지 않았으나, 북한은 외교와 군사관련 인사를 북경에 파견하여 중국의 의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셋째, 2000년 3월 김정일 위원장이 주북한(駐北韓) 중국대사관을 방문해 중국과의 친선관계를 표명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다. 이어 2000년 5월 김정일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베이징을 비밀 방문하여 장쩌민 주석과의 회담을 가졌다. 특히 2000년 5월 말 김정일 위원장-장쩌민 주석 베이징 정상회담이후 중국과 북한은 양국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기 시작하였다. 주목할 점은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의 6월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이징을 방문한

점과 장쩌민 주석이 6·15 남북 평양 정상회담을 열렬히 지지한 점으로 보아 김정일 위원장이 동시에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⁰ 장쩌민 주석은 북한이 경제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체제붕괴 위험이 있어 중국에 간접적이지만 지대한 손실을 끼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¹¹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북한 관계개선을 적극 촉구한 것이다.

중국측 고위인사의 방북 형태를 보면 우선 외교 관련 인사를 파견하고 다음으로 군 관련 인사, 마지막으로 당 관련 인사들이 차례로 방북한 점이다. 즉 강택민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당(黨) 대(對) 당(黨)’ 관계 보다는 ‘국가(國家) 대(對) 국가(國家)’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였으나 중국 외교부와 군부가 평가하는 대북 입장 차이로 인해 ‘국가 대 국가’로 양국관계가 확실히 정립되지 못하는 한계를 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2000년 9월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대외연락부장이 1994년 이후 6년 만에 방북하여 ‘전통적 친선관계’ 발전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40일 후인 2000년 10월 22일 중국 군부의 대거 방북이 이뤄졌다. 즈하오텐(遲浩田)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규모 군 인사가 방북하여 전통적 ‘혈맹관계’를 강조하였다. 중국측 주요 인사로는 송광카이(熊光楷)부총참모장, 첸궈량 선양군구사령관, 지난(齊南)군구사령관, 인민무장경찰 관련 인사들이다. 중국 외교부는

¹⁰ “朝韓首腦會晤,” 『新華社』, 2000년 6월 16일.

¹¹ 談 崢, 于海江 等譯, 他改變了中國 江澤民傳 (上海譯文出版社, 2005), p. 340. 원문은 Robert Lawrence Kuhn, *The Man Who Changed China: The Life and Legacy of JIANG ZEMIN*임. Kuhn은 장쩌민 주석이 55년 만에 성사된 역사적인 남북 평양 정상회담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쩌민 주석은 남북한 정상에게 남북 평양 정상회담을 축하하는 전신을 보내면서 중국은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 실현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대북 관계를 ‘전통적 친선관계’로 규정한 반면에 중국 군부는 ‘혈맹관계’로 규정하여 중국 군부가 북한에 대해 보다 더 강한 유대감을 표방하였던 것이다.

중국측 당 관련 고위 인사의 방북은 2001년 한 해 동안 줄곧 추진되었으나, 북한측 당 관련 고위 인사의 방중은 2001년 1월 김정일 위원장의 비공식 방문¹²을 제외하고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거의 없었던 것이 주목할 만하다. 2001년 1월 김정일 위원장은 부시 미행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중국 정상과 미국에 대한 정책을 시급히 협의하고 조율할 필요로 인해 비공식 중국 방문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공산당을 대표하여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부장(2001년 2월), 쟡칭홍(曾慶紅) 당조직부장(2001년 3월), 쟡춘윈(姜春雲) 당정치국 위원(2001년 7월), 장쩌민 주석의 방북(2001년 9월), 자칭린(賈慶林) 당중앙 정치국위원이(2002년 5월) 대표단을 구성하여 방북하였다.¹³ 장쩌민 주석의 방북은 2000년 5월과 2001년 1월의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이 강하였다.

2001년 1월 김정일의 방중 기간 개최된 중·북 베이징 정상회담에서도 장쩌민은 2000년 6월에 개최된 남북 평양 정상회담부터 6개월 동안 김정일이 취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북한과 기타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지지하였다. 특히 장쩌민 주석이 중국을 북한의 인접국가로만 지칭한 점이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장쩌민 주석은 “김정일 위원장의 영도 하에 경제, 남북통일과 대외관계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성취한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중국은 천

¹² 『人民網』, 2006년 1월 19일.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수행원으로는 김영춘 인민군총참모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부장, 연형묵 국방위원회위원, 김국태 당중앙위원회서기, 인민군대장 현철해 등이다.

¹³ 『中國網』, 2005년 10월 24일.

지개벽할만한 경제발전을 성취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공산당의 개혁 개방 정책이 정확하였다”고 화답하였다. 장쩌민은 “중국은 한반도 인접국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할 것”임을 지적하고 “남북관계의 진일보된 개선과 한반도 자주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북한이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과 관계 정상화를 지지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양국의 정치, 경제 상황을 통보하고 양국의 우호협력관계와 공동 관심인 역내와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다.¹⁴

<표 III-2> 중·북 고위급 인사 교류 현황(2003년~현재)

후진타오 시대(2003년~현재)

방문시기		방중(訪中) 또는 북한측 인사	방북(訪北) 또는 중국측 인사	의제	비고
03	4.21 ~23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00년 6월 김일철 인민 무력부장의 우호친선 방문 이후 북한군 고 위인사로는 처음	수행단: 대장 박재경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시장 박승원(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최진수 주중 대사
	7.12 ~15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부장	친서전달	6자회담 참여발표 (7.30)
	8.7		왕이(王毅) 외교부부장	의제 및 대표단구성	
	8.19		류홍차이(劉洪才) 당대의 연락부부부장	최태복 면담	
	8.19 ~20		쉬차이어후 (徐才厚) 군총정치부주임	6자회담 논의	
	8.27 ~29			1차 6자회담	
	10.29 ~31		우방궈 (吳邦國) 전인대 의장	6자회담, 무상경제원조	수행단: 쑹페이옌(曾培炎) 국무원 부총리, 성화런 (盛華仁)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쑤충민(蘇聰敏) 전인대 외사위 부주임, 위광저우(于光州) 상무 부 부부장,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
	12.25 ~26		왕이(王毅) 외교부부부장	6자회담 논의	

¹⁴ 『中國網』, 2005년 10월 24일.

방문시기		방중(訪中) 또는 북한측 인사	방북(訪北) 또는 중국측 인사	의제	비고	
년도	월일					
04	1.17 ~20		왕자루이(王家瑞) 당대외연락부장	김정일 면담, 비공개		
	2.9	김계관 외부상 부상		6자회담 논의		
	2.25 ~28	2차 6자회담				
	3.23 ~25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	6자회담, 실무그룹구성논의	99년 10월 이후로 외교 부장방문으로는 5년만	
	4.19 ~20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 장쩌민 (江澤民) 군사위주 석과 면담 귀국길 에 天津市 관람 중유무상원조	수행단: 김영춘 총참모 장, 박봉주 총리, 연형 묵 국방위원회 부위원 장, 강석주 외무성 제1 부상 등	
	6.30		중국경제무역 대표단 방북	북한경제무역대표 단과 회담		
	6.23 ~26	3차 6자회담				
	7.12 ~14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군사대표단 방문, 국방부장 차오강 천(曹剛川)과 회담 및 군부 인사들과 회동	매년 1~2회 이상 군사 대표단 및 친선참관단을 상호 교환, 전통적 우호 관계 유지	
	9.24	김정일 위원장, 중국대표단 및 러시아 원의장 접견		중국 당·정 대표 단을 접견 후진타오 주석의 친서 전달 및 장 쩌민 중앙군사위 원회 주석의 인사 를 전달	중국대표단: 이창춘(李 長春) 정치국 상무위원,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 락부부장, 길병현(吉炳 軒) 선전부 상무부 부장, 류홍차이(劉洪才) 대외연 락부 부부장, 우다웨이(武 大偉) 외교부 부부장, 가 오후청(高虎城) 상무부 부부장 등	
	10.18 ~20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친선교류 활성화 등 전반적 우호관 계 발전에 중심 복핵 문제와 관련 북한은 중국의 기 대에 부응하여 6 자회담의 틀을 벗 어나지 않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 힌 것으로 보임.	수행단: 이주오 경공업상, 김영일 외무성 부상, 김 영재 무역성 부상 등 - 경공업상과 무역성 부 상 등이 수행한 점으 로 경제 분야에 대한 협력이 목적	
	12.11	북한경제무역 대표단 방중				

방문시기		방중(訪中) 또는 북한측 인사	방북(訪北) 또는 중국측 인사	의제	비고
년도	월일				
05	2.19 ~23		왕자루이 (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	중조친선협조관계 강화발전과 공동의 관심사 의견교환	
	3.22 ~27	박봉주 내각총리		경제적 측면에서 대북 무상원조 및 상호투자 교역 확 대 문제에 대한 중 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임. “투 자장려 및 보호협 정 체결”	수행단: 로두철 내각부 총리, 김관린 국가계획 위원회위원장, 임경만 무 역상, 김형준 외무성 부상, 김혁진 농업성 부상, 한승준 화학공업성 부상
	3.29 ~4.2		중국공산당 친선대표단	친선방문	
	4.2 ~5	강석주 외무성 1부상		6자회담 논의	북한 보도 매체들은 귀국 이후만 간략히 보도
	4.22	후진타오(胡錦濤), 김영남 아시아 아프리카회의에서 접견			
	5.10 ~14		중국공청단 대표단	친선방문	
	5.24 ~28		중국인민대외 우호협회대표단	친선방문	
	7.9 ~12		중국공산당 대표단		
	7.12 ~14		탕자쉬안 (唐家璇) 국무위원	후진타오 특사, 김정일 위원장 및 백남순 외무상과 면담	
	7.25 ~8.7	1단계 4차 6자회담 개최			
	8.27 ~29		우다웨이 (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6자회담	
	9.13 ~19	2단계 4차 6자회담 개최			
	10.8 ~11		중국정부대표단	노동당창건기념일 참석	

방문시기		방중(訪中) 또는 북한측 인사	방북(訪北) 또는 중국측 인사	의제	비고
년도	월일				
05	10.28 ~30		후진타오 (胡锦涛) 국가주석	중조우호 협력관계강소, 6자회담, 경제원조	중국의 경제발전 강조, 북중간 경제협력 발전 방안 논의에 보도가 집중 되었음. “북-중 경제기 술협조협정”이 조인됨. 수행단: 당 중앙서기처 왕강(王剛) 서기, 왕자 루이(王家瑞) 대외연 락부장, 리자오싱(李肇 星) 외교부장, 당 중앙 정책연구실 왕후닝(王沪 宁)주임, 라오샤오치(廖 曉奇) 상무부 부부장 등
06	1.10 ~18	김정일 위원장		경제 협력 심화, 6자 회담 논의	수행단: 내각총리 박봉주, 외무성 제1부장 강석주, 당 부장 박남기, 이광호, 내각 부총리 노두철
	4.27 ~28		탕자쉬안 (唐家璇) 국무위원	후진타오 특사,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	
	5.5 ~5.11		중국경제무역 대표단	경제관련	
	5.30	백남순 외무상		리자오싱 (李肇星) 중국외교부장과의 회담	
	10.18 ~19		탕자쉬안 (唐家璇) 국무위원	후진타오 특사,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	러시아, 미국 방문 이후 북한을 방문. 특사로서 3번째임.

* 출처: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1998) 자료참고.

* <표 III-2>은 유하연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작성임.

넷째, <표 III-2>에서 보듯 중국과 북한이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고위급 인사의 교류가 시작된다. 이 시기에는 특이하게도 북한의 6자회담 참여문제로

북핵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2003년 4월경부터이다. 2003년 4월 조명록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총정 치국 선전부국장인 박재경 대장과 박승원 총참모부 부참모장이 방중 하였다. 이어 중국 외교 관련 고위급 인사의 방북이 지속되었다. 중국의 대북 경협 추진을 위한 고위급 인사의 북한 방문과 북한 고위급 군인사의 북경 방문 등은 북한이 2003년 7월 1차 6자회담 참여를 발표하게 하는 좋은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다섯째, 북한이 2003년 8월 1차 6자회담에 참여함으로써 중국과 북한간의 고위급 인사의 상호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 시작한다. 특히 2004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에서는 총참모장(김영춘), 총 리(박봉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연형묵), 외무성 제1부상(강석주) 등 당(黨)의 성격을 띤 사람들 보다는 정부대표단 성격을 띤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군부 출신이 대거 방중 하였다. 북한은 중국의 입장 인 북한의 6자회담 참여를 기회로 중국으로부터 정치, 군사안보, 경제협력 등에서 많은 지원을 받으려 하였다.

김정일은 자신의 개혁·개방 정책의 필요성을 군부에게 직접 알리고 싶어서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경제발전상을 직접 목격케 하려는 의도에서라는 평가가 있다. 북한군부가 김정일의 방중을 수행한 이유는 북핵문제로 인해 중국군부와의 직접적인 면담과 협의가 시급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후 2004년 10월에 이루어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중에서는 대부분의 북한 인사들은 경제 관련 인사들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논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표 III-2> 참조).

마지막으로,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세 번이나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면담한 것은 중국

이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 최고지도자의 의사를 직접 김정일에게 빨리 전달하였다는 점과 북한이 핵무장을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김정일 위원장이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와의 면담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과 북한 양국 정상간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려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후진타오 정부는 특사를 파견하여 김정일 위원장에게 자신의 입장을 구두로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 외에도 몇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최고지도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협의하려 하였다. 이에 김정일 위원장도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크게 느껴 중·북 정상회담이 공식·비공식으로 여러 번 개최된 것이다.

북핵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후진타오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2005. 10)과 베이징(2006. 1)에서 공식·비공식 정상회담을 전개하였다. 특히 2005년 10월 후진타오-김정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북한은 양국간 “전통의 공고화, 상호신뢰의 강화, 호혜협력의 확대”를 천명하여 양국간 정치 관계 강화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였다. 양국간 정치 관계 강화는 2006년 1월 후진타오-김정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도 재강조되었다.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후진타오-김정일 평양 정상회담 (2005. 10)

중국의 최고지도자인 후진타오 주석이 당중앙 군사위 주석직을 계승한 후 방북하여 중·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중·북 양국간 발전 및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 의미를 정치·경제 협력 차원에

서 분석하면,

첫째,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중국과 북한간의 ‘당 대 당’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점이다.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의도는 평양방문 20일 전인 10월 10일 북한노동당 창건 60주년 축전에서 이미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축전에서 중국이 북한 최고 지도자를 칭송하고 북한의 대한국 정책뿐만 아니라 대내외정책을 지지한 점이다. 축전에서 후진타오 당 총서기는 북한노동당의 위대한 지도자인 김일성 동지가 창건하였고, 6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였으며, 인류발전 사업을 촉진하여 적극적인 공헌을 하였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후진타오 당 총서기는 김정일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북한노동당의 영도 하에 강성국가 건설에 매진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과 대외관계 발전에 만족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하였다.

둘째, 후진타오 주석은 향후 중국공산당은 북한과는 ‘전통적 우의 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 정신으로 양국의 우호협력관계가 새롭고 더욱 높은 단계로 나아갈 것을 원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후진타오 당 총서기는 자신의 집권기간 동안 북한 노동당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관계가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할 것임을 다짐한 것이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자국과 북한간의 ‘당 대 당’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정치관련 고위 인사들의 정기적 교류를 확대할 것을 북한에 제시하였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전통적인 혈맹관계’라는 표현을 많이 쓴 데 대해 이번 축전에서는 ‘혈맹관계’라는 표현보다는

‘전통적 우의’라는 표현을 쓴 점이 다르다. 이번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시 합의된 ‘4대 방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양국관계를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장쩌민 시대의 양국관계 설정보다 미래지향적이며,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다방면에 걸친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 점이 다르다 할 것이다.

셋째, 한편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여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의 반국가분열법(反國家分裂法)을 즉시 지지하여 북한과의 정치관계가 건재함을 표방하였다.

김정일-후진타오 베이징 정상회담 (2006. 1)

2005년 10월 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불과 두달 반 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비공식 방중하여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과 향후 북한의 정책 변화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였다. 북한 측 보도에 의하면 김 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요청에 의해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1월 17일 중·북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언급하였다. 김 위원장의 방중 행적만 가지고도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었다.

첫째,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비공식 방문이며,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점이다. 김 위원장의 방중이 끝난 직후 중국과 북한이 김 위원장의 방중 행적을 발표할 정도로 베일에 싸인 방중이었다. 1월 17일 후진타오 주석과의 중·북 정상회담 개최일정마저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왜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되었을까? 김 위원장의 신변안전을 위한 점도 있지만 북한이 중국과 북핵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긴박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김 위원장은 북한의 경제와 군사관련 고위 관료들을 대거 대

동하여 방중한 점이다. 박봉주 총리,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인 박남기, 이광호, 내각 부총리 노두철 등이 함께 방중하였다. 군 관련 고위인사의 명단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북한이 중국과 북핵관련 문제를 협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역시 방중한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김 위원장은 중국의 고위 지도층과 중국의 대북 안전보장, 군사협력 및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에 대해 비공개적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정일은 위폐문제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표명하였다. 중·북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비핵화 실현을 재확인하였으며, “6자회담의 난관을 극복하고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도를 찾는 데 중국과 같이 노력할 데 대하여 지적”함으로써 북한의 위폐문제로 인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중국 측 입장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그간 북한이 위폐문제로 인해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한 상태에서 중국은 위폐문제는 현재 마카오 행정특구에서 실사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여 미국 혹은 북한 중 어느 편의 입장에도 지지하지 않았다. 중국은 위폐문제가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여 미국이 이 문제를 확대하지 말기를 원한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위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가 위폐문제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2월 중에 6자회담에 임할 것임을 표방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넷째, 김정일 위원장은 자국과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과학, 기술,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지원을 촉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10월 중·북 평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김 위원장은 양국이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상호이익을 추

구하는 관계로 발전할 것임을 표방한 바 있었다. 그동안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촉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권고를 크게 수용하지 않았다. 북한이 중국의 협력과 지원을 촉구한 것은 향후 북한이 중국의 협력과 자문아래 경제개혁과 개방조치를 확대 실시할 수 있음을 표방한 것이다.

요약하면, 김 위원장의 2006년 1월 방중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상할 수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표현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유도하려는 데 있었다. 결과적으로 위폐문제로 인해 미·북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고, 한반도비핵화는 실현되어야 한다는 한국과 중국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관철된 것이다.

또한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6자회담을 지속하면서 위폐문제는 따로 북한과 직접 협상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 점이였다. 6자회담의 각국의 협상대표들이 김 위원장의 방중 전후로 양자회담 혹은 3자회담을(중국대표 참여)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협의에 나서면서 후진타오 주석의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이 실효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미국 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베이징 접촉, 송민순 한국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면담 등이 재연되었다.

또한 중국이 김정일 위원장의 경협 촉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중국은 중·북 양국간 경제협력이 증진되면 될수록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지가 증대되고, 이는 나아가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하여 중국의 중재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을 지지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2) 북한의 개혁 개방 촉구

장쩌민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개혁 개방을 실시하는 것이 북한에 이롭다는 점을 역설하여왔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2001년 이후부터 방중 기간마다 덩샤오핑(鄧少平)의 개혁 개방 정책을 지지하고 있음을 표방하였다. 특히 장쩌민 주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주저하고 있다고 보고, 고도성장과 사회주의 체제 고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에 강조하여 왔다.

2001년 9월 장쩌민 국가주석은 방북기간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왕후닝(王滬寧) 중앙정책실 부주임을 대동하였다. 이는 장쩌민 정부가 개혁 개방은 곧 체제의 위협이라는 북한지도층이 갖는 불안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한 것이다. 장쩌민 주석은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 북한도 개혁과 개방을 실시하면 고도성장과 사회주의 체제 견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중국은 북한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채택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임을 권고한 것이다.

장쩌민 정부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강조하여 왔다면, 후진타오 정부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기 시작한 점이 다르다 할 것이다. 아울러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을 더욱 촉구하였다. 이는 후진타오 주석이 한반도 안정 유지를 위한 한국의 입장과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지지하였기 때문이다. 2005년 가을 중국은 국가부주석 쩡칭홍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북한에 비밀리 보내 김정일과 면담하였다. 당시 쩡칭홍은 김정일에게 한국과 협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쩡칭홍은 북한이 남북관계에 있어 너무 수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국과 정치협상을 진척시켜 양국관계를 정

상화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쩡칭훙은 북한이 국방비를 감소하면서 대외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이 전력으로 북한의 변화를 도울 것임을 표명하였다.¹⁵

이에 대해 김정일은 북한의 정세가 중국과 달라 한국의 의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아무리 빈곤하다 하더라도 체면 때문에 물자가 풍부한 한국에 어떻게 구걸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 중국 대표단은 성과가 없자 일정을 앞당겨 중국으로 돌아가 버렸다.¹⁶

나. 군사·안보분야

(1) 북핵문제

1993년 3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¹⁷ 고조된 북핵 위기는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에 의해 해결될 조짐을 보였다. 그러다가 2001년 초 부시 미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 폐지, 재래식 무기, 미사일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북한의 핵동결 의지마저 의심하기 시작하자, 북·미관계가 크게 악화되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큰 위구심을 가졌으나 이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2년 10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핵개발 계획을 시인

¹⁵ 『聯合網』, 2006년 8월 21일; 『연합뉴스』, 2006년 8월 8일; 『爭鳴』, 2006년 8월 8일.

¹⁶ 위의 글. 당시 당중앙 조직부 부장 賀國強, 당중앙 사무처 주임 王剛 등이 함께 방북하였다.

¹⁷ 북한은 1985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였으며, 1992년에는 한국과 한 반도비확화공동선언을 비준하였다. 공동선언은 남북한이 공히 핵무기 실험, 핵무기 제조, 핵무기 생산, 핵무기 수입, 핵무기 배치, 핵무기 사용 등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하자, 미국은 북한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에 더욱 초점을 맞춰 대북 압박을 가하였다. 한편 중국은 2002년 10월 2차 핵위기로 인해 북한과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증대되었다고 판단하여 중·북간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였다. 특히 중국은 고위급 인사인 왕자루이 당대외연락부 부장, 탕자취안 국무위원,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등을 차례로 방북시켜 북한과 6자회담 개최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였다(<표 III-2> 참조).

중국은 당시 북한이 핵개발 계획 사실을 과장한 것으로 보고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핵개발 계획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국은 이번에도 북한이 사전에 북한의 핵개발 계획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고 미국에게 시인한 점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품었을 것이다.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자 2003년 1월 10일 장쩌민 주석은 부시 미대통령과 전화통화로 북한의 NPT 탈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나아가 중국은 2003년 2월 12일 IAEA이사회가 북핵 문제를 유엔안보리의 표결에 부치자 이를 찬성하여 북한의 핵보유 노력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2003년 1월 NPT 탈퇴와 2003년 2월 5KW 원자로 가동 등으로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2003년 3월 20일 이라크 공격을 감행하였다. 후진타오 정부 출범 직후 후진타오 주석은 6자회담의 유효성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대북 협상력 강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후진타오 주석은 “6자회담이 핵문제 해결의 효과적 제도이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언급하며 6자회담에서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주장하였다. 북한은 미국이 신속히 이라크에 군사 공격을 감행하자 미국이

자국에 대해서도 신속히 공격할 가능성이 클 것을 우려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2003년 4월 부시 대통령이 중국과 직접 협의하여 미국, 북한, 중국 3자회담 약속을 북한으로부터 받아 내어 4월 23일 3자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나 회담 중 북한 대표가 핵무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으로 회담이 무산되었다.¹⁸ 이후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3차례에 걸친 회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주된 이유는 미국이 “북한의 先핵폐기와 미국의 先보상 불가” 입장을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은 “미국의 先 대북 적대정책 포기과 핵동결에 따른 보상”을 고수하였기 때문이다.¹⁹ 또 다른 회담 성과가 도출되지 못한 배경으로는 당시 미국이 북한과는 양자회담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방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정권을 전복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으로 양국이 크게 양보해서 협의를 도출할 상황이 아니었다.

6자회담은 3차 회담까지 별 다른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자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이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핵

¹⁸ 『조선일보』, 2006년 10월 14일; Karen DeYoung(*Washington Post* 편집부국장), *Solder: The Life of Colin Powell*, 2003년 4월, 콜린 파웰(Colin Powell) 미국무장관은 3자회담을 준비하면서 북·미 양자회담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으며,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Henry Rumsfeld) 미국방장관은 “미국의 목표는 북한정권의 붕괴이어야 하며 김정일 정권과 대화는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의 격려로 부시 대통령이 중국 지도층과 직접 협의해 3자회담 약속을 받아 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럼스펠드는 일련의 메모를 통해 “미국의 목표는 북한정권의 붕괴이지, 김정일 정권과의 대화는 아니다”라고 하며 강력히 반발했다는 것이다. 럼스펠드는 자신의 반발이 수용되지 않자, 미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켈리(James Kelly) 국무부 아태 차관보를 강경파인 존 볼턴(John Bolton) 당시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¹⁹ 김국신 외,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3.

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하기를 촉구하였다.²⁰ 중국의 큰 명절인 구정(春節) 때인 2005년 2월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불참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였으며 이어 3월 31일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 만큼 6자회담은 군축회담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2005년 5월 11일 중앙방송에서 5MW 원자로에서 8,000개의 폐연료봉 추출을 완료하였다고 보도함으로써 북한은 한반도비핵화 원칙을 폐기 처분한 것이었다. 한국은 북핵 폐기 조건으로 2005년 6월 200만KW 전력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기도 하였다.²¹ 중국은 북한의 돌출 선언과 행동으로 중국이 북한에게 속았을 뿐만 아니라 배신당한 기분이 들 정도로 북한에 대해 크게 불쾌하였을 것이다.

4차 6자회담 재개전인 2005년 9월 부시 미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핵확산에 대한 우려만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 역시 핵확산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여 북한 핵무기의 해외 이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였다 하더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2003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중국은 대북 협상에 주력함으로써 북한이 한반도비핵화 준수와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사전 협의를 정례화 하는데 동의를 얻어냈다. 그리하여 마침내 중국의 중재 노력으로 2005년 9월 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을 포함한 6개국의 공동성명

²⁰ David Sanger and William Broad, "U.S. Asking China to Press North Korea to end Its Nuclear Program," *The New York Times*, February 9, 2005.

²¹ 김국신 외,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p. 3.

이 발표되었다.

미 재무부가 4차 6자회담이 진행 중이던 2005년 9월 15일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를 북한의 위조지폐 유통 및 돈세탁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우선적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적하자 북한이 크게 반발하였다.²² 미국 정부는 북한의 위폐문제는 6자회담에서 논의될 성질이 아니라는 입장을 주장하여 4차 6자회담 진전이 없어 보였다. 당시 중국은 미국이 위폐문제를 제기하여 6자회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고 다만 조사 중이라고만 언급하여 미국이나 혹은 북한 측 어느 국가의 입장도 지지하지 않았다. 6자회담 재개라는 안건을 가지고 후진타오 주석은 2005년 10월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중·북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2005년 11월초 개최될 5차 6자회담에 북한이 참가할 것임을 발표하였으며, 나아가 북한이 경수로건설 요구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여 중국의 긍정적인 대북 협상력과 역할이 크게 표출되었다.

후진타오 주석은 방북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 최고 지도자의 의지, 즉 중국은 북한의 핵포기 뿐만 아니라 한반도비핵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직접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표시한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 방북 이전에 합의된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북한외무성은 즉각적으로 미국의 요구인 ‘선(先) 핵포기’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경수로 사업 재개에 따른 핵동결을 주장하여 북·미 간에 입장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북한외무성 발언이 나온 후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성과는 북한의 5차 6자회담 참여 확답

²² 김국신,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4.

과 아울러 북한의 경수로 사업 재개 요구 철회 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으로 5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한국의 핵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북한의 주장을 중국이 지지함으로써 남북한 동시 핵사찰이 의제로 나올 것이며, 아울러 미국의 ‘선(先) 핵포기’에 대해 북한은 ‘핵동결과 경수로 사업 요구 철회’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었다. 당시 중·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6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포기 선언, IAEA의 남북한 동시 사찰과 5개국의 대북 경제지원을 위한 실무적인 회담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전망이 가능한 것은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이후부터 4차 6자회담 재개조차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중국은 대북 방문외교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실현시켜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2년 12월 북한에 제공하였던 중유지급을 중지하고 한반도에너지개발 기구(KEDO)도 중유지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시설 동결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급히 고위 인사인 왕자루이 당대 외연락부 부장, 탕자쉬안 국무위원,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등을 차례로 방북시켜 북한과 6자회담 개최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여 왔다. 특히 4차 6자회담 재개전인 2005년 9월 부시 미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데 대해 후진타오 주석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여 2005년 9월 19일 4차 6자회담이 재개되었기 때문이다. 4차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공동성명의 핵심은 제1항의 합의였다. 6개국은 평화적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회담의 목표라는 데 전원 합의하

었다. 4차 회담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비핵산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협정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전면적으로 핵폐기를 할 경우 북한이 ‘평화적 핵이용권’에 대한 협상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 4차 회담의 특징이었다.²³ 중국의 격렬한 대미 협상으로 부시 미행정부는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공동성명에 삽입토록 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²⁴ 2005년 11월 9일에 개막된 5차 6자회담에서 4차 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을 ‘공약 대 공약’과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9월 19일 공동성명을 이행을 약속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되었다. 당시 중국은 의장국으로 의장성명을 도출한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6자회담이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우선, 중국의 대북 정상회담과 5차에 걸친 회담에서 나온 9월 19일 공동성명과 의장성명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의 진척이 거의 없이 난항을 거듭해 오고 있는 점이다. 다음으로 부시 미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 간의 전화 협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무부가 4차 6자회담 진행 중에 북한의 위폐문제를 제기함으로써 6자회담에 임하는 미·중 정상간의 협의를 무색케 한 점이다.

중국은 나름대로 6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중국이 밝히고 있는 이유는 타당성이 있는 점이 많다. 중국은 첫째, 북·미 간의 불신이 크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중국은 북핵 포기 등 6개항에 걸친 공동성명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

²³ 전현준 외,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 3.

²⁴ John J. Tkacit, Jr., “A New Track for China after North Korea’s Nuclear Test?,” Policy Forum Online 06-91A, Nautilus Institute (2006. 10. 26).

장과 해석이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6자회담이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미국 측에 책임이 더욱 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중국은 미국과 북한이 자국의 권고를 크게 수용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판단으로는 우선 중국이 북한에 대해 미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북한이 중국의 권고를 표면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 없이는 중국의 중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점이며, 셋째, 북한이 중·미간의 이견을 잘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계속 관철하여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그동안 중국은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인 점은 긍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구체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의 책임도 있지만 중국의 대북 전략이 미국의 대북 전략과 너무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후진타오 정부는 북·미 양국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억제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로 역내안정을 취하고자 하였다. 북핵 실험 이전에 지니고 있었던 중국의 딜레마는 북·미간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미국과 북한 중 어느 국가의 입장을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자신의 행동이 미국에 가까우니, 아니면 북한에 가까우니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북핵문제에 있어 중국은 장기적인 해결 방안만을 제시하면서 북·미간 중재역할을 맡고 있는 데서 연유한 점이 크다. 중국이 나름대로 단기적인 처방을 미국과 북한에 명확히 제시하였다면 미국과 북한 양 국가 중 어느 국가가 이를 지지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

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단기적인 처방을 제시하지 못한 배경에는 북핵문제의 조건 없는 해결 방식 보다는 북한정권의 안정을 더욱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은 한반도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정책추진에 있어 중국은 정치적 타결을 위한 장기적 접근을 주장하는 반면에, 미국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군사적인 방법으로라도 북한의 핵보유와 핵무기 이전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핵 실험이후: 중국의 대북 제재 범위

2006년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후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중국이 찬성한 점은 미사일문제에 대해 미·중 간의 의견이 많이 접근된 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미사일 능력 개발 문제이긴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향후 동북아 안정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미·중간 의견 접근이 가능하였다. 중·북 우호조약 체결 45주년 기념기간 중국은 중·북 우호조약 체결을 축하하기 보다는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에 찬성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 등과 같은 북한의 국방력 강화 노력을 반대하는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발사가 동북아 안정을 훼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미사일 발사실험이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추측 보도가 나오자 중국은 만약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자국의 영향력과 위상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북한의 핵실험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표명하였다.

북한은 중국과 여러 국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되었음에도 10월 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실험 계획을 발표하여 일주일 만에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었다. 북한은 미국의 ‘핵 전쟁 위협과 제재 책동’ 때문에 핵 억제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실험을 한 것이며 핵무기 선제 불사용,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무기이전 불허를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은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를 주장하였다.²⁵ 북한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라는 언급은 한반도 주변국들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동북아에 대해 핵위협을 제거하여야만 북한도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북핵폐기를 위한 회담보다는 북한을 포함한 핵국가들과의 핵군축회담을 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10월 16일 공식 확인하였다.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핵 실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였다.²⁶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감행을 의외로 생각하지 않았던 같다. 북한이 강성대국과 선군정치를 기치로 대내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고 경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군사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핵실험을 감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북핵 실험으로 인해 중국은 자국의 대북 전략과 대북 영향력 만회를 위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북 제재방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²⁵ 김국신 외,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p. 7.

²⁶ Jing Huang and Xiaoting Li, “Pyongyang’s Nuclear Ambitions: China Must Act as a Responsible Stakeholder,” The Brookings Institution (October 13, 2006).

기존의 중국 방식을 고수할 것인가에 대해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처하게 되었다. 중국은 한반도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외교, 경제적 제재를 가하면서 강력한 자국의 의지를 표현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였다. 중국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안정보다 북한의 핵무장이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보고 유엔 안보리의 결정과 미국의 입장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북핵 실험직후 미국은 유엔회원국들로 하여금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선에 대해 화물검색을 실시하고 전면적으로 무기금수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초안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대북 제재의 범위와 성격을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군사적 조치도 할 수 있다는 초안을 제시하였다.²⁷

중국은 고위급 대미·대일·대한국·대러·대유엔 외교를 전개하여 미국 주도의 대북 무력제재안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북핵 실험이 한반도 비핵화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유엔안보리의 대북 무력제재를 제외한 외교 및 경제 제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중국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헌장 7장(경제 및 무력 제재 등을 포함한)을 포괄적으로 적용코자하는 데 반대하여 7장 중 41조에만 찬성하였다.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중국은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대사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단호하고 건설적이며, 적절하고 신중한 대응 (a firm, constructive, appropriate but prudent response)”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은 여전히 6자회담을 문제 해결의 현실적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우선 유엔의 대북 비군사적 제재안에 찬성하면서 6자회담

²⁷ 『연합뉴스』, 2006년 10월 13일.

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여야함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만 하면 북한의 핵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동시에 표명하였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조치는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의 자국에 대한 금융제재 문제가 6자회담 복귀의 관건이며 금융제재가 해소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²⁸ 이는 다시 말하면 향후 중국이 유엔주도의 대북 제재에 참여할 경우, 북한은 중국이 자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과 중국이 그동안 증재해온 미국의 금융제재 해소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이로서 북한은 중국과 군사협의를 할 가능성은 더욱 적어졌으며, 북·미간의 금융제재에 대해 극적인 타결이 없이는 중국의 증재를 북한이 수용하지도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에 대해 ‘선전포고’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편으로는 북한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북한에 표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부 기자회견을 통해 자국의 대북 제재 결의안 찬성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첫째, 중국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한반도비핵화의 목표를 견지하고 핵확산을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함으로써 2차 북핵 실험으로 인해 중국이 지지하고 있는 한반도비핵화와 핵비확산 정책이 무효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중국은 유엔안보리 1718호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고 북한이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하고 비핵화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²⁸ 『參考消息』, 2006년 10월 10일. 북한 최고인민상임위원장인 김영남의 발언. 김영남은 경제제재가 있더라도 북한경제는 총체적으로 상승추세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있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빌려 자신의 북핵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향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표방한 것이다.

둘째, 기자회견에서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취한 조치는 ‘징벌’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 왕광야 주유엔 대사의 대북 징벌성 조치 발언과 차이를 보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고 일관되고 일치되고 있으며 징벌은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효하고 적당하고 적절한 조치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반도비핵화 실현이 각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식한데 있다고 언급하였다. 각국은 이처럼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취하고 회담에 복귀하여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피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한반도핵문제는 협상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과 입장이라고 밝혔다.²⁹

중국이 대북 외교 및 경제 제재를 실행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대북 금융거래와 투자 사업을 잠정 중단하여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중국은행에 지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일부 중국은행들은 중국소재 중국인과 북한의 금융거래(대북 송금, 인출 등)를 동결하고 있다. 중국소재 은행³⁰은 중국 민간기업의 대북 투자 역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변경무역을 공식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있다. 중국외교부는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²⁹ 중국 外交部 대변인 류젠차오(劉建超)의 기자회견, 2006년 10월 12일.

³⁰ 중국의 4대 은행이라고 지칭되는 은행은 中國銀行, 工商銀行, 建設銀行, 農業銀行임.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안보리가 이미 통과한 1718호 결의를 책임감 있게 집행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향후 관련문제는 결의안 요구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단동소재 중국은행 역시 대북 외환업무를 동결하였으며 중국세관은 대북 수출품 수송 화물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무역상들의 말을 인용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 이후에 단지 부분적으로 통제가 강화됐지만 생필품인 사과, 중고 TV세트, 섬유 등을 실은 중국의 트럭들은 예전처럼 북한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북 교역에 빠르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중국 은행 중 적어도 2개만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직후 국경 교역 업무를 중단하기도 했지만 중국세관원들은 화학제품이나 정교한 기계류를 실은 북한행 컨테이너에 대해 통상적인 검사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다.³¹

둘째, 중국의 대북 제재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중국은 중·북 국경의 철조망을 다시 구축하였다. 중국은 북한내 어려움으로 인해 탈북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철조망을 다시 구축하여 북핵 실험으로 인해 북한의 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음을 북한측에 경고한 것이다.

셋째, 중국정부는 자국의 대북 석유 공급 중단 조치를 부정하고 있으나 석유 공급을 축소하여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넷째, 중국은 다만 식량지원은 북한의 경제난을 감안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대북 식량지원을 축소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중국 변경 내에서 발생하고 1718호 결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은 자국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

³¹ 『중앙일보』, 2006년 11월 5일; *Washington Post*, November 5, 2006.

라 중국은 홍콩에 정박하는 북한선박에 대한 해상화물을 검색하였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서서히 추진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대미·대러·대북 설득에 나섰다. 우선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 부장은 10월 20일 방중한 라이스 미국무장관과의 회동에서 북한의 핵실험이후 양국의 입장과 협력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미·중간의 입장 조율을 먼저 시도하였으며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³²

또한 중국정부는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로 탕자쉬안 국무위원을 미국과 러시아에 파견하여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파악하고 협의하고자 하였다. 탕자쉬안 특사는 부시 미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후진타오 주석의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³³ 특히 탕자쉬안 특사는 러시아의 세르게이 이바노프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담이후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면 유엔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즉각 해제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시행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는 무기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처럼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대북 제재의 성격과 시한을 정하여 북한에게 6자회담 복귀 명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³⁴

탕자쉬안 특사가 미국과 러시아를 방문한 후 귀국하여 후진타오

³² 『중앙일보』, 2006년 10월 24일; 『로이터 통신』, 2006년 10월 24일. 로이터 통신은 “라이스 장관은 당초 중국이 가장 비협조적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중국이 크게 변한 것을 실감했다”고 보도했다.

³³ 탕자쉬안 특사를 수행한 중국측 인사는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허야페이(何亞非) 외교부 부장조리 등이다.

³⁴ 『중앙일보』, 2006년 10월 14일; 『인테르팍스 통신』, 2006년 10월 14일. 이바노프 러시아 부총리는 또 한반도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북한과 직접 국경을 접하는 러시아와 중국에 있어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주석에게 면담내용을 보고한 직후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을 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어서는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대미·대러 외교를 우선 추진하고 그 결과를 김정일 위원장과 협의한 것이다. 만약 중국이 부시 미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면담이전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협의하였다면 중국 측의 일방적인 입장을 북한에 전달한 셈이 되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국의 신중한 대북 중재 외교라고 판단된다.

그 결과 중국은 자국, 북한, 미국의 3자회동을 주선하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은 중국의 중재외교의 성과였다.³⁵ 주목할 점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아무런 전제조건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다만 6자회담에서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대한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해결하는 것을 보장하라고 미국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실무그룹을 구성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북한은 미국측 제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³⁶

³⁵ 『中國青年報』, 2006년 11월 2일. 중국청년보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10월 25일 주중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3자회동을 제안했고 미국측은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 응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은 27일 남태평양지역 회의에 참가하고 있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은밀히 베이징으로 갈 것을 지시했다. 회동은 다오위타이(釣魚臺) 국민관에서 7시간에 걸쳐 열렸고 3자회동이 진행되는 동안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1대1 회담도 있었다.

³⁶ 『연합뉴스』, 2006년 11월 2일.

(2) 상호신뢰 강화 촉구

중국은 2003년 북한이 NPT탈퇴를 선언하자 크게 충격을 받았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과 긴밀한 협력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호신뢰 강화를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 전에 중국과 긴밀한 군사적 협의를 하지 않았다.

후진타오 주석은³⁷ 중·북 간에 상호신뢰가 강화되면 될수록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하여 북핵문제를 양국에게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피력한 바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군 관련 고위 인사의 정기적 교류를 제안하여 상호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일 역시 동감하여 상호신뢰를 확대하자고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중국은 미·일동맹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북한에 첨단 무기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한이 장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자제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고 핵실험을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중국의 대북 안전보장에 대한 북한의 불신을 가중시켜 왔다. 중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함으로써 국가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에 북한은 핵무기만이 자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차이를 여실히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북 무기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 역시 중국 군부와 협력 가능성을 무시해 버린 것이다. 중국의 대북 무기 지급은 1995년 이후 2002년까지 아주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SPIRI 연감에 의하면, 중국은 북한이 1985년에 주문한 휴대용 SAM인

³⁷ 후진타오 주석은 2003년 3월부터 국가안전과 외사공작 영도소조의 조장을 맡아 북한관련 외사문제를 주재하여 왔다. 국가안전영도소조는 2000년 9월에 성립되어 중국의 대외 전략 설정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영도소조가 되었다.

HN-5A 550개를 1987년에서 1997년 동안 근 10년간 지급하였다. 또한 북한이 1973년에 구입 요청한 Remeo급 잠수함 16척을 1975년부터 1995년까지 20년에 걸쳐 지급하였다.³⁸

북핵문제로 인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불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1961년에 체결한 중·북 우호조약 수정이나 폐기를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재차 감행하여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될 경우에는 중국은 북핵문제로 인해 북한이 군사행동을 감행하거나 주변국이 대북 무력 개입을 할 경우에도 중·북 우호조약 중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북한에 일방적으로 사전 통보하여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개입에 따른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다. 경제분야 호혜협력의 확대

김정일 위원장은 2006년 1월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과 베이징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김 위원장의 중국 체류기간이 2000년 이래 가장 긴 8박 9일의 여정을 기록한 점과 우한(武漢), 광저우(廣州), 쑤하이(珠海)와 중국의 경제특구가 처음으로 구축된 선젠을 방문하였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2000년 5월 이후 제4차 방중으로 제1차에서 제3차 방중이 주로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에 머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으며 북한의 개혁·개방과 대중국 경제협력 의지를 함께 표명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상기 지방 방문은 마치 덩샤오핑 위원장이 1989년 천

³⁸ SIPRI Yearbooks, "Transfers and licensed production of major conventional weapons: Exports to North Korea, sorted by suppliers. Deals with deliveries or orders made 1993~2002," KON 1993~2002. pdf.

안문사태로 인해 미국, 일본과 국제사회들로부터 고립되어 대외 자본과 기술이 차단되었을 때 1992년에 상기 지역을 방문한 것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였다. 덩샤오핑은 이 지역에서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 중국이 향후 경제개혁과 개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표방한 적이 있었다. 그 후 일본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중 경제지원을 재개하였으며 국제사회도 서서히 대중 경제협력과 지원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북핵문제로 인해 북한의 상황이 고립된 것처럼 중국이 국제적 고립에 처하였던 1989년~1992년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을 지지함을 대내외에 표방한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방중 기간 동안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한 과학, 기술,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지원을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김 위원장과 그의 수행원이 중국의 IT 및 통신장비 관련업체와 항만 개발과 농업개혁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중국의 국유기업, 민간기업과 다국적기업의 대북한 투자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북한은 북핵문제로 인해 국제적 경협과 해외 자본 유치에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에 더욱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판단한 데 있다. 이는 북한이 중국의 교역, 투자자본과 지원이 한국의 대북 투자, 교역, 지원보다 더욱 안정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북한과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생존을 유지하고 나아가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확대하여 대북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였다. 이는 중국이 이전에 취하였던 ‘북한의 생존 유지’를 위한 지원전략에서 ‘경제개입정책(Economic Engagement Policy)’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양국은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감안하여 경제 분야에서 호혜협력의 원칙아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양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호혜협력의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 지는 우선 중국의 대북 경제 협력을 구체적으로 교역, 투자, 지원 등으로 분석한 다음 평가하기로 한다.

(1) 교역

<표 III-3>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1999년까지 북한의 대중 무역액은 평균적으로 약 4,500만 달러 수준으로 거듭해서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측 분석에 의하면 2000년~2004년 중·북 무역은 연간 평균 무역 증가율이 남북한 무역 신장률보다 2배 정도로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특히, 2002년부터 중·북 무역액은 매년 30%씩 증가세를 보여 2003년에 1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2004년에는 14억 달러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중·북 교역액은 16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그 중에서 중국의 대북 수출이 약 10.8억 달러, 중국의 대북 수입이 약 5억 달러로 중국이 약 5.8억 달러 상당의 무역 흑자를 보았다. 이러한 통계는 중국측 통계와 비슷하였다. 중국 역시 중·북 무역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2002년부터는 이전의 3~7%에 머물던 교역 신장률이 10%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평가하였다.³⁹

³⁹ Liudunqiu, "DPRK's Reform and Sino-DPRK Economic Cooperation," *Nautilus* (2006). 중·북 무역 신장률을 중국은 1997년에는 6.5%, 1998년 4.1%, 1999년 3.7%, 2000년 4.8%, 2001년 7.37%, 2002년 7.33%, 2003년 10.23%, 2004년 13.85%, 2005년 15.8% 증가로 평가하고 있다.

<표 III-3> 북한과 중국의 교역상황(1997년~2005년)

(단위: 억 달러)

년도	북한 총 교역액	북한-중국 교역액	중국의 수출	중국의 수입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한국포함)/한국 비포함
1997	21.7	6.5	5.3	1.2	29%
1998	14.4	4.1	3.5	0.6	28%
1999	14.8	3.7	3.2	0.5	25%
2000	19.7	4.8	4.5	0.3	24%
2001	22.7	7.4	5.7	1.6	32%
2002	22.6	7.3	4.6	2.7	32%
2003	31.1(23.91*)	10.2	6.3(#3.9)	3.9	32%
2004	35.5(28.57*)	13.6	-(#5.8)	-	39%/48%
2005	40.5	15.8	10.8	5	39%/52%

* 출처: KOTRA, Nautilus.org에 기재된 Liudunqiu, “DPRK’s Reform and Sino-DPRK Economic Cooperation” 참조.

* 중국해관총서(Custom General Administration, PRC), 중국세관통계 각 연도.

* KOTRA 중국무역통계자료로서 Nautilus에 기재된 Liudunqiu의 분석과 다름.

<표 III-3>에서 중국과 북한의 교역은 2001년 이전에는 20%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01년을 시작으로 전년대비 8% 증가하여 32%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을 기준으로 한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북한의 전체 대외 교역의 절반에 달하게 되었다. 교역 규모로 볼 때, 상호 교역문제에 있어 이전보다 양국간 협력은 증가되었으나, 상호 호혜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III-3>에서 북한과 한국의 교역을 제외하면 북한의 대중 교역 비중이 48%~52%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중 교역 규모 역시 2000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 중국은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에도 북한의 제1위 교역상대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2005년에는 중국은 북한 대외 교역의 52.6%를 차지하는 등 중국은

이미 북한에 있어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교역 상대국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다.⁴⁰

북한의 대일 교역규모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의 영향으로 2002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도 북·일 무역은 약 1.9억 달러로 전년대비 23%나 감소하였다. 북한 시장에 있는 상품의 약 70%가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라면, 북한에서 만든 것은 20% 정도이며, 일본과 러시아 산이 약 10%를 점하고 있다. 한국제품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교역상에 나타난 중·북 무역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중·북 무역의 특징

첫째, 원조와 변경 무역에 머물던 방식이 정상 국가간 무역으로 활발해 지고 있다.

둘째, 1990년대는 중국은 북한과의 변경무역을 통해 전기용품에서 대부분의 생활용품에까지 이르는 작은 규모의 교역이 주종을 이뤘다면 2000년부터는 중국의 대기업이 위주가 되는, 그리고 공업화 관련 투자 기업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⁴¹

⁴⁰ 중국측 해관통계에 의하면 2005년도 중·북 교역액은 북한의 전체 교역액의 3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⁴¹ 『鳳凰週刊』, 2006년 1월 27일.

<표 III-4> 북한의 대중 무역 방식(2003년~2005년)

(단위: 천 달러)

	2003			2004			2005		
	수출	수입	무역액	수출	수입	무역액	수출	수입	무역액
일반 무역	20,880	431,258	452,138	75,000	566,229	641,229	147,942 (29.5%)	678,527 (62.8%)	826,469 (52.3%)
가공 무역	10,334	45,080	55,414	21,684	35,166	56,850	20,939 (4.2%)	51,634 (4.8%)	72,573 (4.6%)
변경 무역	81,319	114,649	195,968	156,365	143,675	300,040	181,855 (36.4%)	259,501 (24.0%)	441,356 (27.9%)
보세 무역	278,268	20,445	298,713	321,182	20,844	342,026	145,445 (29.13%)	34,451 (3.2%)	179,896 (11.4%)
무상 원조	-	10,889	10,889	-	14,556	14,583	-	38,124 (3.5%)	38,124 (2.4%)
기타	4,745	5,674	10,419	7,935	14,055	21,990	2,976	18,947	21,923
합계	395,546	617,995	1,023,541	582,193	794,525	1,376,718	499,157	1,081,184	1,580,341

* 출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北-中 경제협력관계의 변화: 현황과 함의』
(평화나눔센터 제23회 정책포럼, 2006) 재인용.

* 무역협회, 『2005년 북한 중국의 무역동향 및 시사점』 (무역진흥본부 남북교역팀, 2006), p. 3.

셋째, <표 III-4>에서 북한의 대중 수출은 아직까지 변경무역의 비중이 가장 크고, 수입은 일반무역이 최대(63%)를 점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대북 수출 품목들 중 변경무역으로 관세혜택을 받는 품목이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대중 수출 중 변경무역이 최다인 것은 변경무역에 대해 중국 측이 관세 50%, 증치세 50%, 감면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약 80만 인구인 단동의 경우, 약 100개의 단동 기업과 50~60개의 연변의 기업들이 변경 무역 종사 허락을 받았다.⁴² 변경 무역이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다.

⁴² 『環球時報』, 2006년 8월 11일.

<표 III-5> 중국의 대북 주요 수입품(2003년~2005년)

순위	품목명	2003		2004		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비합금선철	14753	28.0	31,031	110.3	19,6	-81.9
2	고철	10523	124.4	17,999	71.0	21,6	20.0
3	무연탄	15428	108.8	49,085	218.2	108,3	120.6
4	수산물	84023	0.1	87,187	3.8	15,8	-81.9
5	철광석	6,871	99.9	43,808	537.6	64,3	46.9

넷째, <표 III-5>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중·북 양국간 무역이 여러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무역이 아니라 중국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략적 산업 투자에 집중된 무역인 점이다. 예를 들면, <표 III-5>에서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이 2003년부터 연간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철광석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중국은 북한의 천연 광산 자원을 계속해서 확대 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의 무역이 많은 요령성은 2005년도에 강재원료 수입량이 18.1만 톤에 달해 전년대비 24%나 성장하였고, 금속광속의 수입은 12만 톤으로 전년대비 9%를 증가하였고, 무연탄은 63.9%의 증가를 보였다.⁴³

2003년에서 2005년간 중국의 대북 주요 수입품을 분석해 보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투자 위주의 교류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의 해외투자 방식에서 보듯이 중국은 자원개발을 중국투자의 중점 영역으로 삼고 후진타오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원 외교’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자원획득 노력은 대북 수입품목과 투자 현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석유, 철

⁴³ 『鳳凰週刊』, 2006년 1월 27일.

강, 시멘트, 석탄 등 주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조달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국의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에너지 확보 외교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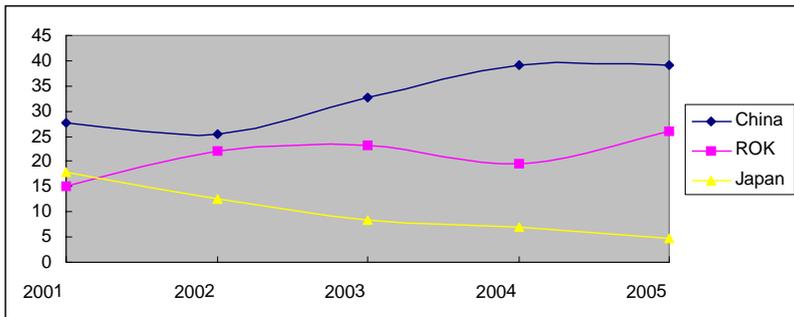
중국기업은 북한이 상대적으로 광산자원, 해양자원, 임업자원이 풍부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미 탐사된 광산자원만도 360여 가지에 이르는 등 중국이 자원수입을 하는 데 큰 매력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북 교역 역시 북한의 광산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이들 광물자원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표 III-6> 북한과 중국, 한국, 일본과의 교역 추이(2001년~2005년)

(단위: 미 \$ 백만, %)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중국	737.5	27.6	738.2	25.4	1,022.9	32.8	1,358.2	39	1,581.2	39
한국	403	15.1	641	22.1	724	23.2	697	19.6	1,055.8	26
일본	474.7	17.8	369.5	12.7	265.3	8.5	252.6	7.1	193.6	4.77

* 출처: KOTRA



* 출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北-中 경제협력관계의 변화: 현황과 함의』 (평화나눔센터 제23회 정책포럼, 2006) 재인용.

다섯째, <표 III-6>에서 보듯 중·북 교역량이 증가되는 가운데 북·일 무역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중국이 북한 무역의 다양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독점적 위치를 강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 경제에 있어서의 중국의 경제력은 한국과 일본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2005년의 경우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24만 명인 반면에 중국을 방문한 북한인은 12만 5천명에 달해 중국의 북한 방문이 2배를 점하고 있으며, 양국간 인적 교류가 남북한 보다 더 활성화되고 있는 점이다.⁴⁴

마지막으로, 향후 중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 3국간에 물자가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을 최종적으로 만들려는 계획도 나옴에 따라⁴⁵ 중국과 북한의 무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큰 점이다.

(2) 투자

중국의 대북 투자 금액은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리 나타나고 있으나 대북 투자 규모가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통일부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대북 투자액은 100만 달러(2003년), 5,000만 달러(2004년 김정일 방중 이후), 1억 달러(2005년)로 증가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중국 신문에 의하면, 중국의 대북 비물질성 직접 투자는 약 1,100만 달러(2003년), 1,400만 달러(2004년, 1,700만 달러 설도 있음), 1,490만 달러(2005년, 1억 달러 설도 있음)로 증가되고 있다.⁴⁶

⁴⁴ 『亞洲時報』, 2006년 8월 7일.

⁴⁵ 『中新社』, 2006년 3월 16일.

⁴⁶ 『環球時報』, 2006년 8월 11일.

<표 III-7>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1995년~2004년)

(단위: 개사, 미\$천, %)

년도	기업수	투자액	중국투자증가량	점유율
1995	-	0	-	0
1996	-	0	-	0
1997	-	0	-	0
1998	-	160	-	0.90%
1999	-	610	-	3.30%
2000	-	0	-	0.00%
2001	2	2,600	100.00%	14.00%
2002	4	1,503	36.63%	8.10%
2003	5	3,526	70.11%	19.10%
2004	8	8,998.80	71.85%	48.60%

* 출처: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KOTRA.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北-中 경제협력관계의 변화: 현황과 합의』

(평화나눔센터 제23회 정책포럼, 2006), p. 11 재인용 <www.ksm.or.kr>.

중국 당국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누계는 2006년도 상반기까지 44개 항목에 합의 액은 21,935만 달러, 실제 투자액은 12,722만 달러였고, 그 중 대부분은 2005년과 2006년 상반기 중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의 경우 13개 항목에 합의 금액은 10,345만 달러이나 실제 투자액은 5,369만 달러였다. 2006년도 상반기 경우 14개 항목에 합의 금액은 8,643만 달러, 실제 투자액은 5,874만 달러로 전체 대북 투자가 2006년도 상반기에 집중되고 있다.⁴⁷

중국의 대북 투자의 신호탄은 2003년 중국 온주 상인(溫州 商人) 그룹인 중욱집단(中旭集團)이 평양 제1백화점의 경영권 확보이다.

⁴⁷ 『조선일보』, 2006년 10월 15일.

중유집단은 이어 평양 제2백화점, 고려호텔 등 평양의 주요 빌딩에 대한 경영권마저 확보하였다. 중국 기업은 북한 경제가 회복되면 평양의 지가(地價)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선점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다가 중국과 북한 정부가 대북 투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중국기업의 대북 투자 양상이 다각적으로, 다면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주목할 점은 중국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자국 산업에 긴요한 무연탄, 철강석 등 전략적인 에너지 공급 확보를 위해⁴⁸ 대북 독점 개발권 확보에 치중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중국의 대북 투자가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자본과 북한의 자원을 서로 활용하는 방식에 많이 치중되고 있는 점이다.

북한의 광산 채굴과 관련하여 2006년 들어 현재까지 중국에 넘어간 광산채굴권만도 10여 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시아 최대 노천 철광인 무산철광, 북한 최대 무연탄광인 용등탄광, 혜산 구리광산, 만포 아연광산, 회령 금광, 평양 인근의 몰리브덴광 등이 채굴권을 중국기업에 넘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⁴⁹

구체적으로 중국의 국영기업인 오광집단(五鑛集團)은 4개의 관련 회사들과 더불어 북한의 용등탄광(鑛登炭鑛)에 합병개발을 위한 합자기업을 세우기로 합의하였으며⁵⁰ 길림성 정부도 북한에 전력을 제공해 주는 대신에 북한 양강도의 혜산청년동광(惠山青年銅鑛) 채굴권을 따 내고 있다.⁵¹ 또한 북건성의 7개 기업도 2004년 8월 북한의

⁴⁸ “Asia’s Great Oil Hunt,” *Business Week*, November 15, 2004.

⁴⁹ 염주영 칼럼, “北광산 사재기, 제2 동북공정인가,” 『서울신문』, 2006년 9월 22일.

⁵⁰ 아오키나오토, “중조우호 명분하에 북한의 경제식민지화: 제2의 티베트화 진행 중,” 『북한』, 제409호 (2006. 1), p. 175. 계획으로는 한 달에 약 100만 톤 무연탄이 중국으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⁵¹ 『鳳凰週刊』, 2006년 1월 27일. 아오키나오토에 의하면, 산둥성의 초금집단(超金集

무연탄 플라스틱 공장에 1,700만 달러(약 1,0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의 철강재 채굴과 관련하여, 중국은 철강재의 보다 안전한 확보를 위해 대북 투자를 합병개발이라는 조건으로 사실상 독점 개발권 확보에 더욱 치중하여 왔다. 길림성 최대의 국유기업인 통화강철 그룹(通化鐵鋼集團)은 연변천지공사(延邊天地公司)와 중국 최대의 국영 철광석 수출입회사인 중천집단(中鐵集團)과 함께⁵² 매년 1,000만 톤 철광석 확보를 위해 70억 위안(약 900억 원) 투자로 북한의 가장 큰 철광산인 무산(茂山)철광의 50년 개발권을 획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국가개발은행은 상기 회사에 연화로 8억 위안의 대출을, 경화로 16억 위안 대출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대북 자원 개발 및 임대권을 지원하고 있다.⁵³

무산철광 개발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협의를 보면 거의 독점적으로 중국 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50년이라는 엄청난 독점기간 뿐만 아니라, 중국회사는 전기, 기계, 설비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대신에 북한은 자원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북한회사가 경영 결정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⁵⁴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은 자원을 공급 받는 대신에 북한에 발전소를 건설해 주는 방식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요령성(遼寧省) 공

團)이 약 280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권을 획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⁵² 아오키나오토(青木直人), “중조우호 명분하에 북한의 경제식민지화: 제2의 티베트화 진행 중,” pp. 173~178. 아오키나오토에 의하면 투자예정 금액은 최소한 약 70억 위안(약 900억 원)으로 상정되어 있고, 50억 위안은 광산개발 비용이고 나머지 20억 위안은 무산에서 길림성 통화까지 철도와 도로 건설비용에 충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⁵³ 『東方早報』, 2005년 11월 2일.

⁵⁴ 아오키나오토(青木直人), “중조우호 명분하에 북한의 경제식민지화: 제2의 티베트화 진행 중,” p. 174.

안국 사업부와 제휴하여 원산시는 2006년 1월 중국 측이 전력설비를 제공하는 대신에 아연, 금, 등 광산자원을 중국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물물 교환 방식 계약이 몇 개 성사되었다.

또 다른 중국의 대북 투자 유형은 중국이 북한의 항만개발 독점권을 확보하는 투자 방식이다. 중국이 나진항 공동 개발권을 확보한 것이 그 예이다. 중국은 2~3년 전부터 북한과 교섭하여 2005년 7월 길림성 훈춘시 소재의 동림경제무역유한공사(東林經濟貿易有限公司)와 훈춘변경경제협력구보세유한공사(邊境經濟協力區保稅有限公司)가 북한 나진시 인민위원회경제협력공사와 함께 공동으로 ‘나선국제 물류합영공사’를 설립하였다.⁵⁵ 이 계약 건 역시 중국 측에 아주 유리하게 되어있다. 중국의 경영기간이 50년이라는 장기간이란 점만 보아도 그렇다. 중국이 개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진항의 사용 방식을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⁶

중국 외에 마땅한 외국 투자처를 찾을 수 없는 북한으로서는 불리한 조건으로도 중국의 대북 투자 확보에 더욱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⁵⁷ 북한은 38개 국가사업 목표를 설정하여 중국기업의 참여를 독려하여 왔다. 북한은 2000년 이후로 매년 1회씩 열었던 국제박람회를 2005년 이후부터는 매년 2회로 개최하여 대북 투자를 촉진하였다.

⁵⁵ 특히 무산철광은 50년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중국에 넘어갔다. 지린(吉林)성 훈춘시는 나진항 3·4호 부두 50년 독점사용권을 확보했다. 지린성 훈춘시는 나진항 3·4호 부두 50년 독점사용권을 확보했다. 투먼(圖門)~함북 남양~나진~청진간 철도부설권도 들어 있다.

⁵⁶ 아오키나오토(青木直人), “중조우호 명분하에 북한의 경제식민지화: 제2의 티베트화 진행 중,” p. 176.

⁵⁷ 중국의 한 전문가는 북한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첫째, 강한 군인, 둘째, 강한 정치, 셋째, 강한 경제력을 당의 주요 지침으로 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두 가지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마지막 항목인 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강성한 사회주의 국가는 요원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5년도 국제박람회에 참가한 196개국 외국기업들 중 중국 기업이 179개나 되었으며 (이 중 80%가 요령성 기업임) 다음으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정도였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문제와 6자회담 난관으로 북한정세에 대한 불안감으로 서양 기업들이 대북 투자를 꺼려하였기 때문이다.

2005년 북한은 자국에 대한 외국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얻은 기업 이윤이나 청산 자금을 세금 없이 전부 국외로 송금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나섰다. 북한의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CPEEC)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투자에로의 길’(2005년)이라는 외국인 투자 가이드북에 의하면, 북한은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산 소유권을 승인한 만큼 자연재해나 국토건설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국유화 하거나 거둬들이지 않는다고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북한에서 번 노임(임금)과 기타 합법적 소득은 60%까지 해외로 송금하거나 반출할 수 있으며, 60%를 초과한 금액은 외화관리기관에 반출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⁵⁸

<표 III-7>에서 보듯, 2001년 이래로 중국의 대북 투자는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해외의 대북 전체 투자의 약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투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OTRA와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북한에 진출한 외국 기업 수가 300개이고 그 중 40%인 120개 정도가 중국 업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민영기업들의 대북 투자 마인드는 북한의 핵실험 실시 발표로 동결되고 이미 작지 않은 규모의 자금을 북한에 투자한 기업들은 북한에서 당장 철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

⁵⁸ 『한국일보』, 2006년 9월 1일; 『연합뉴스』, 2006년 9월 1일.

로 전해졌다. 중국 업계에서는 자국 정부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결의안에 찬성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민영기업들이 대북 투자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이다.⁵⁹ 현재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 기업의 대북 신규 투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북 투자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다.⁶⁰

그러나 북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중국의 대북 경제 제재가 해소될 경우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북 투자 방향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대북 투자를 증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⁵⁹ 『조선일보』, 2006년 10월 15일; 『中國經營報』, 2006년 11월 14일.

⁶⁰ 위의 글. 조선일보는 『中國經營報』 보도를 인용하면서 북핵실험으로 인한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상황을 보도하였다. 『中國經營報』에 의하면, 매장량이 200만 톤으로 추정되는 한 탄광 개발에 투자한 저장(浙江) 창진성스(創今盛世)발전유한공사 천샤오양(陳小洋) 총경리는 “북한의 핵실험 실시는 우리에게 너무 돌연한 일이었다”면서 고민을 토로했다. 북한 탄광개발로 매월 무연탄 2만 톤을 북한에서 수입해 왔다는 천 총경리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전에는 탄광에 많은 광원들이 채탄을 하느라 분주했으나 지금은 한산하기 그지 없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천 총경리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 후 모든 것이 일순간에 변해 “현재 남은 것이라고는 사후처리 밖에 없다. 이미 투자한 자금을 바로 빼낼 수도 없어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지만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역시 절강성 ‘윈저우(溫州) 상인’의 한 사람인 왕젠민(王建民)은 자신의 광산회사를 갖고 있으면서 3년 전 북중 무역업을 개시, 그동안 평양과 베이징을 오가며 철광 등을 수입해 돈을 벌었으나 이제는 북한을 상대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렸다. 북한의 석유 채굴까지 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지하수계가 엄청나게 파괴될 수 있고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의 모든 수도를 오염시킬 수도 있어 차라리 북한을 상대로 돈을 벌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단둥(丹東) 한반도 경제서비스자문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곳을 찾는 사람) 모두 북한 핵실험에 분개하고 있고 공황상태에 빠진 사람도 있다”면서 “비교적 큰 투자를 한 사람은 즉각 철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경무역이 가장 쉽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경영보는 “단둥외무총공사의 경우 여러 해 동안 북한측 고객과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농산품에서 기계까지 다양한 물품을 수출해 왔으나 이제 대북 투자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회사의 한 관리자는 “우리는 현재 더 이상 북한측과 함께 일할 용기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수출대금 100만 달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핵실험은 상황을 전보다 더욱 나쁘게 만들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의 대북 환률 상 우세와 값싼 북한의 노동력 외에는 북한의 투자 환경이 열악하여 급속도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면, 전기가 없어 중국투자자가 직접 자가 발전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시설이 열악하여 도로를 중국 투자자가 내어야 하며, 먹을 양식도 없어 중국 투자자가 종업원의 먹을 양식을 준비하여야 하며, 생산설비가 없어 생산설비도 중국에서 들여와야 하는 등 생산시설 확대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경제적 고립으로 인해 중국의 대북 각종 에너지 투자 및 채굴권 획득이 거의 독점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자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획득을 위한 대북 교역과 투자에 더욱 치중하게 되어 이를 위한 북한의 사회간접시설(SOC) 지원이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요약하면, 중·북간 경제협력 향방을 교역과 투자 면에서 보면 양국이 약속한 ‘상호 호혜협력의 원칙’이 이미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농업을 경제개발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북한의 에너지 확보를 우선순위로 택하고 있어 양국의 경제협력 순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제 11기 최고인민회의의 4차 전체회의에서 북한은 농업부분 발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천명하였으며⁶¹ 2006년 현재 재정지출에서 농업 부분 예산을 29.1%로 할당하는 등 농업 희생을 통해 자국의 생존을 지탱하려고 애쓰고 있다.⁶²

반면에 중국은 ‘자원의교’ 차원에서 북한과의 경협을 선점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원하고 있는 대중 경제협력 방식과 목표가 중국의 대북 경제이익 목표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양국간 경제협력이 중

⁶¹ 『新京報』, 2006년 4월 17일.

⁶² 『人民罔』, 2006년 3월 23일.

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북한경제가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현재 중국의 북한 경제에 대한 점유정도는 다른 어떤 나라도 대체하기 힘들다고 평가한 것처럼⁶³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는 더욱 확대되고 북한의 불균형 개발이 지속될 것이다.

(3) 중국의 대북 지원

중국은 자국의 대북 지원이 북한의 안정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북한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와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소비하는 원유의 약 70%와 식량을 지원하여 왔다. 대북 지원과정에서 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의 지원으로 북한과 여러 방면에서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유지되기를 강조하였다.⁶⁴

중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방식은 무상과 차관형식의 유상원조가 있다. 우선 매년 약 7억 달러 정도가 차관형태로 북한에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⁶⁵ 중국이 전략품목으로 보고 있는 원유는 약 50만 톤 규모로, 인도적 차원으로 보고 있는 식량은 약 40만 톤 규모로 북한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⁶³ Liudunqiu, "DPRK's Reform and Sino-DPRK Economic Cooperation," *Nautilus* (2006), p. 3.

⁶⁴ PRC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ew Release on DPRK, Beijing (October 23, 2004).

⁶⁵ 설충, 통일부 정보분석과 토론 (2006. 8. 14).

<표 III-8> 중국의 대북 원조 추이(1997년~2004년)

(단위: 백만 달러)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원조·증여	34.4	32.0	48.4	27.6	69.1	16.6	10.9	14.6

* 출처: 중국무역통계, KOTRA.

다음으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약화된 상황에서도 대북 무상원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무상원조 금액의 증감이 크게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KOTRA가 분석한 <표 III-8>에서, 중국의 대북 원조 규모는 1997년~1998년에는 매년 약 3,000만 달러 정도를 유지하다가 1999년에는 약 4,800만 달러로 증대되고 2000년에는 2,760만 달러로 급감하였다가, 다시 2001년에는 6,900만 달러로 급등하였다. 그 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약 1,500만 달러 규모를 유지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이 2005년 10월 방북시 북한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약 4,500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공식통계상 중국의 무상원조는 약 4,000만 달러에 달하며 무상원조가 중요한 것은 북한에 전략물자인 에너지와 양식을 지원하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원조액은 2005년 기준으로 4,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⁶⁶

이처럼 중국의 대북한 원조 규모가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하는데는 양국관계의 원만함과 소원함 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KOTRA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KOTRA는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⁶⁶ 이태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정세와 정책』, 2006년 특집호 (2006), p. 11.

<표 III-9> 국가별 대북 지원액 비교(1995년 6월~2004년 7월)

(단위: 만 달러)

국가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UN 기구 (2004년말)	한국(2004년 말, 곡물차관 포함)
대북지원액	67,829	65,000	34,000	25,000	25,000	131,109	99,493

* 출처: Naver blog에서 재인용; 『연합뉴스』, 2004년 9월 2일.

지금은 하나의 ‘선물의 형태’로 양국 정상이 만났을 때 보통 지원하는 형식을 취해 왔기 때문에 금액의 증감에 큰 뜻을 부여하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지원 규모가 단지 추정치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이나 북한이 확실한 지원 규모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표된 중국의 공식적인 무상원조 외에 교역채무 상계, 원유, 식량지원 등 공개되지 않는 대북 지원규모는 중국의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⁶⁷ 중국 측 추정치가 일반적으로 낮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상기 이유 외에도 중국이 북한의 체면과 입장을 고려하여 수치를 낮춰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9>에서 보듯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국가별 대북 지원액 규모 순으로 보면 유엔기구가 약 13억 달러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한국이 약 10억 달러, 미국이 약 6.5억 달러 순이다. 중국과 일본의 대북 지원액이 같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중국의 대북 지원액이 사실상 미국보다 평균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지원액이 많았던 것은 당시 제네바 핵합의 이후 미국이 약속한 대북 중유와 곡물지원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핵실험이후 중국은 무상

⁶⁷ 조명철 외,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10. 13).

으로 지급하는 대북 송유를 지속하고 있으나 교역차원의 대북 석유는 감소된 양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⁸

⁶⁸ 『동아일보』, 2006년 10월 24일. 중국과 북한은 압록강의 수봉(북한측 관리), 원평(雲峰·중국측 관리) 등 4개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양국이 똑같이 나눠 쓰고 있으며 압록강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대북 송전은 경제 제재가 강화되도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의 자회사인 중조우의수유기공사가 관리하는 석유는 헤이룽장(黑龍江)성 다칭(大慶) 유전과 랴오닝(遼寧)성 랴오허(遼河) 유전 등 동북지역에서 나온다. 선양(瀋陽)시 외곽에서 합류한 송유관은 심광 촌 저유소를 통해 일부는 중국 국내에 공급하고 일부는 압록강 밑을 지나는 11km 길이의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보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IV

평가와 전망

중국의 대북 전략 기초를 분석하고 아울러 대북 정책 현안을 3개 부문을 통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현안을 정책의 지속 측면과 변화 측면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1. 평가

가. 중국의 대북정책: 지속측면

첫째, 중국의 대북 전략 기초인 중국의 북한 안정과 한반도 안정 유지 노력이 정책 현안을 그 중에서도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북한 안정 우선 입장이 지속되었다.

둘째, 중국의 한반도비핵화 지지와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협상에 의한 해결 노력 역시 지속되고 있다. 또한 6자회담을 위한 중국의 중재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표출되었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간 의견 조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여 온 것이다.

셋째,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고 대북 경협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중국이 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촉구하여 왔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대북 입장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섯째, 통일문제와 관련, 장쩌민 정부와 후진타오 정부는 공히 남북한 관계개선을 통한 통일 실현보다는 현상유지를 통한 ‘두개의 실체’를 인정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로써 중국정부는 남북한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개선되는 데는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한반도 현상유지라는 말보다는 남북한 개선을

통한 통일실현이라는 장기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중국은 2001년 부시 미행정부 출범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체제의 안정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중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 발사한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나.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측면

중국이 북한행위를 허용하는 범위를 정책 변화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중국은 자국의 국가이익 자체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의 행위 즉,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 행위 등에 대한 허용 범위의 변화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중국의 대북 정책 중 변화되고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북한에게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구상을 제시하여 북핵 실험 전까지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정치관계를 확대해 오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 4개 방면 협력 방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전략적 협력관계를 표방하여 대북 접근을 강화하고자 하나 북한이 이를 크게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후진타오 정부 출범이후 북핵 실험 이전까지 중국의 대북 교역과 투자가 크게 증대한 것은 변화이다. 중국정부는 중국기업의 대북 교역과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도 큰 변화이다.

셋째,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서부터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와 외교 제재를 찬성하여 북한에 대한 압박수위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의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북핵 실험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유엔안보리에서의 제재수준 행동에 대해 반대를 표방하여 왔기 때문이다. 중국이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1718호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써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임을 표방한 것 역시 처음 있는 일로 큰 변화이다.

넷째, 북핵 실험이후 중국은 기존의 북한의 안정보다는 한반도비핵화를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서서히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중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유엔안보리의 1718호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은 중국과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반도비핵화 실현이 6자회담의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북한의 안정을 어느 정도 훼손하더라도 한반도비핵화가 실현되어야한다는 입장을 표방한 것은 변화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중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면서도 북한의 소극적인 대남 접근을 지적하고 있는 점은 변화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이전에는 남북한에게 똑같이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더욱 인정하고 있는 점이 변화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의 입장보다는 미국의 입장에 더욱 경청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획득하려는 노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변화이다. 중국은 북핵문제로 인해 미·중 관계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외 정책 노선 상 묵인되는 북한의 허용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점이 변화라 할 수 있다.

2. 전망

북한이 핵실험이후 6자회담 복귀를 표명하여 회담개최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으나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 해서 북핵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크게 다르고 중국이 미국의 대북 무력제재를 적극 반대하고 있어 북핵문제 해결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대북 정책을 단순히 북핵문제 해결이전과 해결이후로 나누어 예측하고자 한다.

가. 북핵문제 해결이전

첫째,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중국은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의 원만한 성공을 위해 한반도 안정을 훼손하는 행동을 억제할 당면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한편으로는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감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북한에 강력히 표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6자 회담 참여국들이 일방적인 대북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둘째,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선언을 한 이상 어떠한 문제도 6자회담 틀 내에서 미국과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외교적 중재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중국은 회담이 지속되는 한 유엔안보리의 대북 외교 및 경제제재를 중단하여야함을 강조하고 그동안 취하였던 대북 제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중요한 이유는 직면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고 국제사회의 협력(특히 미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을 분열시키려는 데 있다.

셋째, 미국은 차기 6자 회담에서 북한에게 5MW 원자로나 영변 플

루토늄 재처리 시설의 해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북한 내 활동 재개 등을 요구할 것이다.⁶⁹ 이에 대해 중국은 한편으로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이용하여 핵개발을 지속하여서는 않되며 국제사회의 요구인 핵폐기에 대한 성실한 행동방향과 시간표를 제시하여야 함을 촉구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을 지속하지 않을 경우 중단되었던 대북 제재를 재개할 수밖에 없음을 북한측에 주지시킬 것이다.

넷째, 중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금융제재 해제를 논의하여야 함을 미국에 촉구하고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가중할 것이다.⁷⁰ 그럼에도 북한이 6자회담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돈세탁방지법으로 대북 금융제재의 법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⁷¹

다섯째, 중국은 2006년 8월 유엔안보리 결의 찬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북 외교적 경제적 압력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자국 변경 내에서 의심나는 북한선박에 대한 해상 화물 검색을 실시하고 또한 이에 대한 유엔의 요구나 미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수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미국주도의 PSI에

⁶⁹ *The New York Times*, November 5, 2006; 『조선일보』, 2006년 11월 6일.

⁷⁰ 『조선일보』, 2006년 11월 3일. 알렉산더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주한 미국대사는 2006년 11월 2일 “6자회담 틀 안에서 구성될 미·북 실무그룹에서 대북 금융제재를 야기한 불법행위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협력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국민대 특강에서 6자회담을 재개기로 한 미국과 북한 간의 베이징 합의와 관련, “우리는 실무그룹을 구성해 북한과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말했다.

⁷¹ 위의 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회는 2006년 10월 31일 뇌물수수과 금융관리규정 위반, 돈세탁범죄 억제를 위한 ‘돈세탁방지법’을 통과시키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법은 중국이 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전개하고 외국의 돈세탁 방지기구와 관련 정보와 자료 교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는 전면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중국은 일방적으로 대북 교역, 투자, 지원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단행함으로써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핵개발 포기를 선언토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자국의 대북 외교적 제재 보다는 경제 제재가 보다 더 효과가 클 것으로 파악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대북 경제 봉쇄를 취하지 않고 중국 국유기업의 대북 전략 물자 수출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물자 중에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대북 에너지 공급을 서서히 중단시킬 것이다. 중국은 우선 기존의 대북 송전을 중단하고 석유공급도 기술적 결함이라는 이유로 이전 보다 더 길게 적어도 7~10일 간격으로 중단하여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곱째, 중국은 대북 정상적인 경제교류, 교역, 경제지원이 유엔안보리 1718호 결의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속할 것이나 그 규모는 서서히 감소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은 대북 전략물자를 전면적으로 중단하여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비난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중국은 2006년~2010년 기간동안 지원하기로 한 대북 무상지원 중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덟째, 중국은 WMD 확산지원 단체의 대북 진출차단, 핵물질의 해외이전 차단, 북한으로의 자금유입 차단 등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적극 추진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물질을 해외에 이전하는 것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발각될 경우 미국이 일방적인 대북 무력 제재를 감행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아홉째, 중국의 대북 외교 제재 가능성과 관련해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외교 차원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는 중·북 우호조약의 조항 수정을 요구할 경우이다. 중·북 우호조약 중 “조약 체결국 중(중국 혹은 북한) 한쪽이 무력으로 침략을 받으면 다른 쪽은 즉각 전력을 다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반드시 제공한다”고 명시한 본문 2조에 대해 조약 수정이나 적용 범위를 재해석하여 중국의 입장을 선언하는 것이다. 중·북 우호조약 원문대로만 해석하면 유엔이 대북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은 북한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⁷²

중국 외교부는 자국 군부의 입장과 북한의 안정을 고려하여 중·북 우호조약 적용 범위를 선언하거나 조약 수정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은 중·북 우호조약에서 명시된 바에 의하면 양국의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사전에 합의하여 행동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여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억제할 것이다. 중국은 향후 북한이 핵실험을 재차 감행하거나 핵무기 보유 포기를 선언하지 않아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이 선제공격하거나 공격을 당해 전쟁상태에 돌입하였을 때 중·북 우호조약에 의거한 중국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선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재차 핵실험을 다시 감행해도 중국은 중·북 우호조약 수정이나 갱신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중·북조약 제7조에 의하면 중·북조약이 수정 또는 폐기되기 위해서는 쌍방 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국이 조약 개정이나 폐기를 제안한다하더라도 북한이 이

⁷² 『동아일보』, 2006년 10월 24일.

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개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중·북 조약폐기를 국제사회에 선언해 버리는 것뿐이다.

나. 북핵문제 해결이후

중국이 북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시나 범위는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핵개발 포기 선언과 NPT 가입을 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핵사찰이 시작되는 시기로 간주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이 시점을 계기로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중국은 기존에 취하였던 대북 제재조치를 중단하고 북핵실험 이전에 추진하여 왔던 대북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양국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중·북간 고위급 인사의 교류를 재개하고 대북 교역, 투자, 지원 등 경협분야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둘째, 중국은 북한 내에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경공업 생산 기지를 원할 것이며, 북한은 중국의 경공업 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특구개설을 서두를 것이다. 북한은 자국의 농업 개발을 위한 중국 정부의 기술, 시설투자자와 지원을 적극 촉구할 것이다.

셋째, 중국은 대북 지원 확대를 활용하여 자국의 동북3성 노(老)공업기지의 북한 이전 문제, 북한의 천연자원 공동 개발권 확보 등에 주력하고 중국의 임대권이 확보되는 지역에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두만강 지역 항구 확보 등에 대한 합의를 북한으로부터 획득할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중국정부와 중국 기업이 통신, 교통, 도로, 천연자원, 기계, 중공업, 철강제조, 화학 산업

분야에 투자와 지원을 유도할 것으로 보여 중·북간 마찰이 예상된다.

넷째, 중국은 한국, 일본,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와 지원에 앞서 대북 지원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이 예상되는 것은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북한경제가 위축되면 북한이 중국 상품을 더욱 많이 수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중국은 대북 대규모 차관(거의 무상차관)을 통해 중국에서 기피하고 있는 환경오염산업, 천연자원 발굴 산업에 치중하여 북한의 환경오염이 심화될 것이다.

여섯째, 중국은 북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2020년까지 자국의 경제 발전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주변 환경 안정을 최우선시 할 것으로 보여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북핵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경우, 중·북 경제교류 확대는 한반도 평화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이 한국과의 경제협력 보다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선호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북 경제 의존도는 커지게 되면서 북한경제는 불균형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덟째, 북핵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중국은 지속해서 남북개선을 통한 통일실현만을 지지할 것으로 보여 중국이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의 우호세력으로 등장하기 보다는 한반도 현상유지를 원하는 세력으로 남을 것이다.

V

결론

중국의 대북 정책을 3개 분야에 걸쳐 분석하였다. 후진타오 정부는 장쩌민 정부와는 달리 대북관계 확대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여 중국은 대북 경제·협력분야에서 교역, 투자, 지원 등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중국이 내세운 대북 전략적 협력정책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유엔안보리의 대북 외교 및 경제제재 결의에 참여하는 등 대북 전략의 우선순위가 변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이 한반도비핵화를 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유엔안보리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중·북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였다.

1960년대 문화혁명 당시의 중·북간의 갈등이 이념갈등에서 비롯하여 양국관계가 크게 악화되고 국경에서 군사적 마찰까지 있었다. 현재 북핵문제로 인한 중·북갈등은 북한의 핵보유를 중국이 용납할 수 없다는 중국의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속되는 중·북 안보분쟁이다. 중국이 대북 전략 기초와 북핵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여기서 중국이 고려하는 중요한 사안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중국은 대북 전략을 설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북핵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국면이 조성되어서는 좋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기에 미국과의 협의 하에 전면적인 대북 접근을 시도해 나갈 것이다. 이는 구소련이 미국과의 평화공존을 천명할 때, 중국은 대미 투쟁을 선포하였던 1960년대 중·소분쟁이 시작된 초기의 현상과 같은 상황으로 나타날 것이다. 전반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출발한 미·중 협력관계는 미국이 점진적으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적극 촉구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해 미·중 전략관계가 미·일 전략관계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고 미국이 일본보다 중국을 더욱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 미·중 alignment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은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한반도비핵화를 줄곧 지지하여 왔다. 중국은 북핵 실험으로 인해 동북아에서의 자국의 핵독점 국가의 지위가 훼손되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북핵 포기를 위한 6자회담 재개 외교와 대북 제재를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중국의 대북 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셋째, 북핵문제에 대해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과는 다른 정책을 전개해 왔다. 미·중 양국이 한반도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정책추진에 있어 중국은 정치적 타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반면에 미국은 북핵문제는 군사적 문제로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북한이 핵실험을 재차 감행할 경우에도 중국은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시도하나 대북 무력제재를 제외한 모든 압력 수단을 행사해 나갈 것이다.

넷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외교적 노력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회 이전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올림픽대회가 마무리된 다음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중국은 자국 대사를

소환하고 고위급 인사의 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등 대북 외교적 제재를 시도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북핵문제가 2008년 올림픽 대회이전까지 자국이 기대하는 방식과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과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하여 회담이 성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역시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당장 미국과 전면적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북한 역시 미·중간의 알력을 활용하여 자국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노력을 지지하여, 자신의 입장을 더욱 극대화해 나갈 것이다. 북한이 미·중갈등과 한·미간의 이견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극화시켜왔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로 자국의 국방력이 크게 제고되고 한국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점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섯째,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단기적으로 중국은 대북 제재에 찬성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나름대로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핵 실험이후 중국은 한반도비핵화를 김정일 정권의 안정보다 더욱 우선시함으로써 중·북관계의 단기적 악화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중국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장래에 대해 미국과의 전략 대화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국은 북한의 핵기술 이전 차단과 김정일 정권교체에 협력하는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관할권을 획득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여덟째,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일동맹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전략적 군사적 협력관계를 확대해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한국과의 관계보다 더욱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핵문제에 대해 중국은 이미 전략적으로 미국과는 다른 정책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북핵문제의 정치 외교적 타결을 위한 한국의 협조만을 촉구하여 왔고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아홉째,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북한이 중국의 권고를 무시하여 나온 결과이기 보다는 중국이 능력은 있으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자 하였기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자제함으로써 영향력 한계에 대해 비난을 감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북한의 대부분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끝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회 이후에도 북한이 중국의 권고와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중국의 대북 외교적 경제적 제재와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의 고립화와 북한정세의 불안은 가시지 않게 된다. 한국의 적실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대북 전략과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단호한 입장이 전개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김국신.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김국신 외.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전현준 외.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조명철 외.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Kuhn, Robert. Lawrence. *The Man Who Changed China: The Life and Legacy of JIANG ZEMIN*. 2006.
- Shambaugh, David. *Modernizing China's Military: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 Xu, Jian. "China's Viewpoint toward Peace Forum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Forum on the Korean Peninsula: Strategy and Implementation*, KINU International Conference. June 9, 2006.
- 談 崢. 于海江 等譯. 他改變了中國 江澤民傳. 上海譯文出版社. 2005.

2. 논문

- 아오키나오토. “중조우호 명분하에 북한의 경제식민지화: 제2의 티베트화 진행 중.” 『북한』. 제409호, 2006.
- 이태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정세와 정책』. 2006.
- Liudunqiu. “DPRK’s Reform and Sino-DPRK Economic Cooperation.” *Nautilus*. 2006.
- Huang, Jing and Li, Xiaoting. ‘Pyongyang’s Nuclear Ambitions: China Must Act as a Responsible Stakeholder.’ *The Brookings Institution*. October 13, 2006.
- McDonald, Hamish. “Beijing considers its Korean Options.” *The Age*. September 7, 2003.
- SIPRI Yearbooks*. “Transfers and licensed production of major conventional weapons: Exports to North Korea, sorted by suppliers. Deals with deliveries or orders made 1993~2002.” KON 1993~2002.
- Tkacit, John J. Jr.. “A New Track for China after North Korea’s Nuclear Test?.” Policy Forum Online 06-91A. Nautilus Institute. October 26, 2006.
- Wang, Fei-Ling. “China and the Two Koreas: Conducts, Concerns and Constraints.” *Xinhua Daily Telegraphy*. Beijing. December 9, 1997.

3. 기타자료

『동아일보』.

『로이터 통신』.

『서울신문』.

『연합뉴스』.

『인테르팍스 통신』.

『조선일보』.

『중앙일보』.

Business Week.

The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東方早報』.

『鳳凰週刊』.

『新京報』.

『新華社』.

『亞洲時報』.

『聯合網』.

『人民網』.

『人民日報』.

『爭鳴』.

『中國網』.

『中國青年報』.

『中新社』.

『環球時報』.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률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변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근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익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익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	--------

연례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소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 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서보혁
 고재홍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